

Contents



I. 재정운동향	03
1. 총수입	05
2. 총지출	08
1) 주요 재정사업 집행현황 및 성과	10
2)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16
3. 재정수지	19
4. 국가채무(중앙정부)	20
II. 기타 부문별 현황	25
1. 국유재산	26
2. 연기금투자폴 운용	29
3. 보증채무	31
4. 정부출자	31
5.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32
III. 주요 재정이슈	35
1. Post 코로나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원격교육 발전방향	36
2.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에 대응한 주요국의 재정동향 및 시사점	42
3.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R&D 투자전략 및 시사점	57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주요내용	62
5. 「국민공감예산」 편성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65
6.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실행 개선방안	69
7. 차세대 디브레인, 데이터 기반 행정과 AI 정부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	72
IV. 주요 재정통계	77
〈참고1〉 재정 용어	105
〈참고2〉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110

재정운용동향

1. 총수입
2. 총지출
3. 재정수지
4. 국가채무(중앙정부)



I. 재정운용동향

- 상반기 적극적 **재정운용** 등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세**와 **세수 호조세**로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적자폭 크게 감소.**
(’20.6월 누계 △90.0 → ’21.6월 누계 △47.2조원, +42.8조원)

총수입

총수입
298.6 조원

6월말까지 **전년대비 진도율 +14.6%p**로, 개선흐름이 지속

국세

전년대비
48.8조원 증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로 인해 국세가 전년대비 17.7%p 증가

6월(누계, 조원)

국세 **181.7**(+48.8)

세외 **16.4**(+3.2)

기금 **100.4**(+20.5)

진도율(%) **61.8**(+14.6%p)

총지출

총지출
345.8 조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속 집행,
코로나 방역 강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3.4%p** 증가

6월(누계, 조원)

예산 **238.5**(+9.8)

기금 **105.0**(+17.8)

진도율(%) **60.4**(+3.4%p)

재정수지

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대비 개선 **+42.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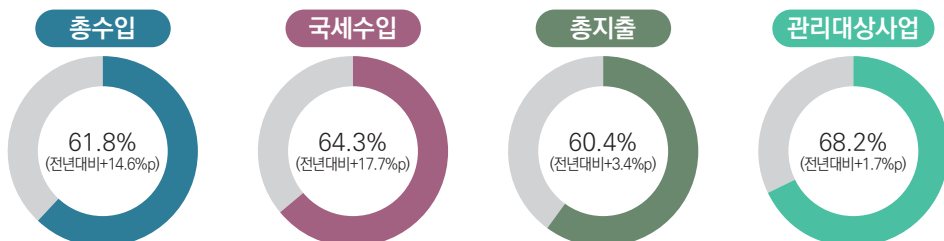
6월 통합수지(누계, 조원)

△47.2(+42.8)

중앙정부채무

898.1조원

주요항목별 진도율(’21년 6월)



1. 총수입

◆ 6월말까지 총수입(298.6조원)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은 14.6%p 증가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6월 (당월, C)	6월 (누계, D)	진도율		1차추경 (G)	6월 (당월, H)	6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6월 (H-C)	누계 (I-D)	추경 (J-E)	결산 (J-F)
■ 총수입	470.7	478.8	27.8	226.0	48.0	47.2	483.0	37.2	298.6	61.8	9.4	72.6	13.8	14.6
• 국세수입	279.7	285.5	14.7	132.9	47.5	46.6	282.7	20.0	181.7	64.3	5.2	48.8	16.7	17.7
• 세외수입	29.1	26.9	0.8	13.1	45.2	48.8	29.3	1.8	16.4	56.0	1.0	3.2	10.8	7.1
• 기금수입	161.9	166.2	12.3	79.9	49.3	48.0	171.0	15.4	100.4	58.7	3.1	20.5	9.4	10.7
(사회보장성 기금) ¹⁾	95.8	100.0	9.0	49.5	51.7	49.5	99.5	9.9	65.6	66.0	0.9	16.2	14.3	16.5
• 세입세출외	-	0.1	0.0	0.0	-	14.9	-	0.0	0.0	-	0.0	0.0	-	-

¹⁾국민연금 · 사회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기금

■ (국세수입, 181.7조원) 코로나 4차 확산 이전으로 ①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②자산시장 호조, ③기저효과 · 우발세수 등에 따라 전년대비 진도율 17.7%p(2차 추경 기준 11.2%p) 증가(+48.8조원)

* 세정지원 기저효과 +13.3조원 제외시 실질적 증가수준은 +35.5조원

- 이월납부: 작년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금년으로 이월되어 납부

- 납부유예: 작년 1~6월 납부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7~12월)로 유예되어 비교대상인 작년 1~6월 납부세액 감소

① (경기회복)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10.4조원), 부가가치세(+5.1조원) 등이 전년대비 +20조원 증가

*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기준): ('19) 56.3 → ('20) 67.5 (+19.8%)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월비, %): ('21.1)0 (2)8.2 (3)11.1 (4)8.7 (5)3.1

② (자산시장 호조) 부동산 · 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7.3조원), 증권거래세(+2.2조원) · 농특세(+2.1조원) 등이 전년대비 +13조원 증가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19.11~'20.5월) 69.3 → ('20.11~'21.5월) 72.7 (+5.0%)

증권거래대금(조원): ('19.12~'20.5월) 1,911 → ('20.12~'21.5월) 3,811 (+99%)

③ (기저효과·우발세수) 작년 코로나 세정지원 기저효과(+13.3조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로
전년대비 +16조원 증가

(단위: 조원, %, %p)

국세수입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6월 (C)	6월 (누계,D)	진도율		1차추경 (G)	6월 (H)	6월 (누계,I)	진도율 (J=I/G)	6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추경 (J-E)	결산 (J-F)
■ 국세수입	279.7	285.5	14.7	132.9	47.5	46.6	282.7	20.0	181.7	64.3	5.2	48.8	16.7	17.7
• 일반회계	271.9	276.3	14.1	129.6	47.7	46.9	274.0	19.2	175.8	64.2	5.1	46.3	16.5	17.3
- 소득세	88.5	93.1	4.2	40.9	46.2	43.9	89.8	8.6	60.3	67.1	4.4	19.4	20.9	23.2
- 법인세	58.5	55.5	3.1	29.3	50.0	52.7	53.3	1.8	39.7	74.4	△1.4	10.4	24.4	21.7
- 부가가치세	64.6	64.9	1.8	31.0	48.0	47.8	66.7	2.6	36.1	54.2	0.8	5.1	6.2	6.4
- 교통세	15.5	13.9	1.4	6.3	40.5	44.9	15.7	1.3	9.0	57.1	△0.0	2.7	16.6	12.2
- 관세	7.7	7.1	0.4	3.5	45.6	49.8	8.3	0.7	3.9	46.3	0.3	0.3	0.7	△3.5
- 기타	37.2	41.8	3.1	18.7	50.3	44.8	40.2	4.1	26.9	67.0	1.0	8.2	16.7	22.2
• 특별회계	7.8	9.3	0.6	3.4	42.9	36.3	8.7	0.8	5.9	67.7	0.2	2.5	24.8	31.4

● (세외수입 16.4조원) 한은잉여금 +1.4조원, 정부출자수입 +0.3조원, 부담금 +1.2조원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7.1%p 증가(+3.2조원)

● (일반회계) 전년도 한은잉여금(+1.4조원(2월 세입 조치)), 정부출자수입(+0.3조원), 부담금(+0.7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0.5%p 증가(+2.6조원)

* 공정위 담합기업 과징금, 경찰청·법무부 벌금·과료 등

● (특별회계) 우체국예금운용수익(+0.2조원), 부담금(+0.4조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3.1%p
증가(+0.6조원)

* '20년 정유업계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및 항공업계 과징금 유예로 인한 기저효과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6월 (당월, C)	6월 (누계, D)	진도율		1차추경 (G)	6월 (누계, I)	6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6월 (H-C)	누계 (I-D)	추경 (J-E)	결산 (J-F)
■ 세외수입	29.1	26.9	0.8	13.1	45.2	48.8	29.3	1.8	16.4	56.0	1.0	3.2	10.8	7.1
• 일반회계	12.9	11.7	0.1	6.9	53.7	59.2	13.7	0.6	9.5	69.6	0.5	2.6	16.0	10.5
- 재산수입	4.7	4.5	0.0	4.4	92.6	97.0	6.1	0.0	6.1	100.3	0.0	1.8	7.8	3.3
- 경상이전수입	6.9	6.3	0.1	2.2	32.2	35.2	6.3	0.6	2.9	46.1	0.5	0.7	13.9	10.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9	0.7	0.0	0.3	31.9	39.0	0.8	0.0	0.3	39.7	△0.0	0.0	7.8	0.8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¹⁾	0.0	-	-	-	-	-	-	-	-	-	-	-	-	-
- 기타 ²⁾	0.5	0.2	0.0	0.1	20.9	42.6	0.4	0.0	0.1	36.9	0.0	0.0	16.0	△5.7
• 특별회계	16.2	15.2	0.6	6.2	38.3	40.8	15.6	1.1	6.8	43.9	0.5	0.6	5.6	3.1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8	6.4	0.4	2.9	43.1	46.2	6.4	0.5	3.2	49.5	0.0	0.2	6.4	3.3
- 재산수입	0.7	0.6	0.0	0.1	13.4	14.8	0.4	0.0	0.1	34.7	0.0	0.0	21.2	19.8
- 경상이전수입	4.9	4.7	0.0	1.5	31.7	32.7	5.0	0.3	2.0	40.7	0.3	0.5	9.0	8.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	1.5	0.1	0.6	38.2	42.3	1.7	0.1	0.8	44.7	0.0	0.1	6.5	2.3
- 기타 ²⁾	2.1	1.9	0.1	1.0	46.8	50.4	2.1	0.2	0.8	35.9	0.1	△0.2	△10.9	△14.6

¹⁾유가증권매각대 등 ²⁾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기금수입 100.4조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14.1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0.7%p 증가(+20.5조원)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6월 (당월, C)	6월 (누계, D)	진도율		1차추경 (G)	6월 (당월, H)	6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6월 (H-C)	누계 (I-D)	추경 (J-E)	결산 (J-F)
■ 기금수입	161.9	166.2	12.3	79.9	49.3	48.0	171.0	15.4	100.4	58.7	3.1	20.5	9.4	10.7
- 사회보장기여금	73.4	74.6	5.9	37.4	51.0	50.2	77.0	6.3	39.7	51.5	0.4	2.3	0.5	1.3
- 재산수입	26.4	28.4	3.3	13.6	51.7	48.0	26.8	4.0	27.8	103.7	0.7	14.1	52.0	55.7
- 경상이전수입	27.4	26.6	0.8	12.8	46.7	48.2	31.0	2.1	14.9	48.2	1.2	2.1	1.4	△0.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4	7.6	0.3	2.2	29.0	28.4	7.9	0.3	2.6	33.5	0.0	0.5	4.5	5.1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5.3	27.3	1.9	13.1	51.5	47.9	26.2	2.6	14.2	54.2	0.7	1.2	2.7	6.4
- 기타*	2.0	1.8	0.0	0.8	39.9	43.2	2.1	0.1	1.2	55.9	0.1	0.4	16.0	12.7

*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2. 총지출

◆ 6월까지 총지출(345.8조원)은 긴급피해 지원, 고용충격 완화, 소득·주거안정, 방역강화, 민간경기 활성화 노력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3.4%p 증가(+29.8조원)

■ (예산) 코로나19 긴급 피해·고용지원, 고용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활성화, 방역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8%p 증가(+9.8조원)

- ▶ (피해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0.4조원), 국민취업지원제도(+0.4조원)
- ▶ (고용·사회 안전망) 주거급여(+0.4조원), 기초연금급여(+2.8조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1.0조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0.4조원), 장애인활동지원(+0.4조원)
-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0.5조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0.3조원)
- ▶ (창업생태계 조성)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0.2조원)

■ (기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성장·재기 지원, 고용유지,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큰 폭(+5.9%p) 증가(+17.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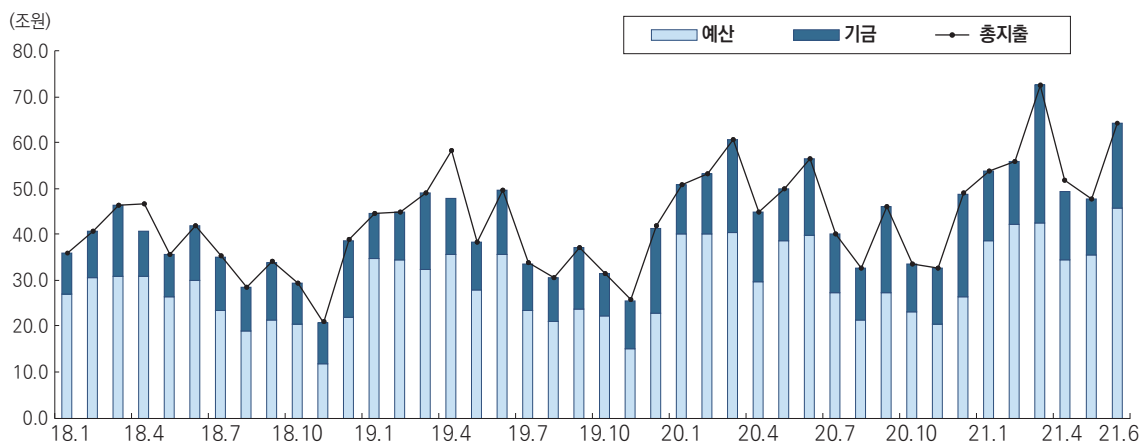
- ▶ (피해지원) 버팀목자금¹⁾(+4.8조원), 고용유지지원금(+0.1조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0.1조원)
- ▶ (성장·재기지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0.1조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0.2조원)
- ▶ (고용·사회 안전망) 구직급여(+1조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1.2조원), 내일배움카드(+0.2조원), 산재보험급여(+0.2조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0.2조원)
- ▶ (미래성장 동력)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0.1조원)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6월 (당월, C)	6월 (누계, D)	진도율		1차추경 (G)	6월 (당월, H)	6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J-E)
					추경 (E=D/A)	결산 (F=D/B)					6월 (H-C)	누계 (I-D)	
■ 총지출	554.7	549.9	56.5	316.0	57.0	57.5	572.9	63.9	345.8	60.4	7.4	29.8	3.4
• 예산	377.5	374.4	39.9	228.7	60.6	61.1	382.3	45.5	238.5	62.4	5.5	9.8	1.8
- 일반회계	323.5	320.8	31.9	193.9	59.9	60.4	321.6	37.3	197.6	61.5	5.4	3.7	1.5
- 특별회계	54.0	53.6	8.0	34.8	64.4	64.9	60.8	8.1	40.9	67.2	0.1	6.1	2.8
• 기금	177.3	175.2	16.5	87.2	49.2	49.8	190.6	18.5	105.0	55.1	1.9	17.8	5.9
(사회보장성기금)	61.2	59.1	5.1	28.9	47.3	48.9	62.9	5.4	33.1	52.6	0.3	4.2	5.3
• 세입세출외 ¹⁾	-	0.4	0.0	0.1	-	30.1	-	-	2.3	-	△0.0	2.2	-

¹⁾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회계·기금별 총지출 추이(당월기준)〉



[참고] 성질별 지출내역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6월 (당월, C)	6월 (누계, D)	진도율		1차추경 (G)	6월 (당월, H)	6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J-E)
					추경 (E=D/A)	결산 (F=D/B)						6월 (H-C)	누계 (I-D)	
■ 총지출	554.7	549.9	56.5	316.0	57.0	57.5	572.9	63.9	345.8	60.4		7.4	29.8	3.4
- 인건비	41.6	41.0	3.8	21.7	52.1	52.9	43.8	4.0	22.6	51.7		0.1	0.9	△0.4
- 이전지출	376.9	379.2	34.8	223.0	59.2	58.8	378.7	39.1	243.4	64.3		4.3	20.3	5.1
- 자산취득	86.2	86.6	10.2	48.4	56.1	55.8	91.3	12.0	52.0	56.9		1.8	3.6	0.8
- 물건비	26.7	25.7	3.6	14.1	52.8	54.7	30.5	4.9	16.6	54.4		1.3	2.5	1.5
- 기타 ¹⁾	23.4	17.0	4.1	8.7	37.1	50.9	28.6	4.0	8.8	30.9		△0.1	0.2	△6.2
- 세입세출외 ²⁾	-	0.4	0.0	0.1	-	30.1	-	-	2.3	-		△0.0	2.2	-

¹⁾상환지출·예비비²⁾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주요 재정사업 집행현황 및 성과

- ◆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경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중점 지원**
- **신산업 투자 증가,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 감소, 상반기 벤처투자 최대 실적 기록, 친환경차 보급률 증가, 취업자수 및 고용률 4개월 연속 증가 등에 기여**

①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 ① **(긴급피해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피해지원 지속 추진

- ▶ **(버팀목자금 플러스 4.8조원)**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0만명에 대해 지원
-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조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2만명에 소득 지원
- ▶ **(전기요금 한시지원 0.1조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66만호 지원
- ▶ **(긴급복지 0.6조원)** 소득·재산 등 적용기준을 한시 완화하여 코로나19 위기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 등 지원 * 한시생계 약65만 가구 지원

- ② **(긴급고용지원)**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취업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 **(고용유지지원금 0.8조원)** 사업주가 폐업 대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0.4조원)**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서비스+구직촉진 수당 지원
- ▶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0.2조원)** 고용위기 지역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지원

- ③ **(돌봄·생활안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 돌봄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 **(일·가정 양립지원 0.2조원)**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 ▶ **(지역아동센터 지원 0.1조원)**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지원
- ▶ **(생활안정자금 융자 0.2조원)** 저소득 근로자, 특고 등에 생활 자금·생계비 저리 융자

【1차 추경 주요사업 실적】 6월말 기준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사업 및 방역사업90% 이상 집행완료, 일부 고용·피해지원 사업들은 채용 등 사전준비 마무리 이후 본격 집행

* 현금지원사업(5.5조) : 버팀목자금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전세버스기사 등 375만명에 5.2조원 지급(94.5%)

* 방역대책사업(7,912억원) :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7,743억원 집행(97.9%)

②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① (고용충격 완화) 고용유지 지원,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장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 ▶ (청년내일채움공제 0.8조원)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2년 이상 근무시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 유도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조원) 기업이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시 장려금 지원
- ▶ (장애인 고용장려금 0.1조원)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조원) 저소득 노인에게 대해 봉사활동 참여기회 및 노인의 전문성·활동 역량을 활용하는 영역의 일자리 제공 * 상반기 76만명 일자리 지원
- ▶ (내일배움카드 0.5조원)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

【고용동향】 취업자수 및 고용률 모두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세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 ('20.12) △62.8 ('21.1) △98.2 (2) △47.3 (3) 31.4 (4) 65.2 (5) 61.9 (6) 58.2

* 고용률 증감(%p, 전년비) : ('21.1) △2.6 (2) △1.4 (3) 0.3 (4) 1.0 (5) 1.0 (6) 0.9

②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통한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 국민 안전·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 (어촌뉴딜 300 0.5조원) 낙후된 항·포구 인프라 개선,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 지원
- ▶ (가로주택정비사업 0.2조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외된 노후·저층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0.5조원) 보행자통행시설 정비, 사고 잦은 곳 개선, 교량 및 터널 보수
- ▶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0.1조원)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복합화 공공편의시설 설치
- ▶ (규제자유특구제도 육성 0.1조원) 지역전략산업을 선정, 특정지역·사업자에 대해 핵심규제 완화 등 규제 특례 적용,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0.8조원) 지역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촉진

③ (수출활력제고) 무역금융·보험 확충,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인프라 개척 등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 **(해외인프라시장개척 0.1조원)** 해외건설 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 해외건설 전문가 훈련, 투자개발 사업 인력양성, 해외인프라 협력네트워크 운영 등 지원
- ▶ **(무역보험기금 0.4조원)** 해외 대규모 인프라 공사 수주 및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등
- ▶ **(수출지원기반활용 0.2조원)** 해외마케팅지원 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지급, 해외 전시회 및 지사 제공 등
- ▶ **(중장기산업설비수출 거래지원 0.2조원)** 2년 이상 거액의 해외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금융조달, 각종이행보증서 발급 등 지원

【수출동향】 상반기 수출액은 사상 첫 3,000억 달러 돌파,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19년 하반기 수출액을 초과 달성 (자료 : 산자부)

* 수출액(억달러) : ('19下)2,711 ('20.上)2,405 ('20.下)2,720 ('21.上)3,032

【중소기업 수출】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 19년 하반기 수출액을 초과 달성 (자료 : 중기부)

* 수출액(억달러) : ('19下)513 ('20.上)465 ('20.下)542 ('21.上)565

③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① (소득안정)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 지원

- ▶ **(기초연금지급 10.3조원)**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대상을 전체 수급자로 확대 지원
- ▶ **(생계급여 3.3조원)**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생계급여 지급 대상 확대
- ▶ **(자활사업 0.5조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에 대해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의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한 자활근로 참여 등에 따라 급여 지원
- ▶ **(대학생 근로장학금 0.2조원)** 594개교의 저소득층 대학생에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 ▶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0.4조원)** 소규모 사업 저임금근로자 및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확대 지원

② (방역 및 의료지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치매 국가 책임제 적극 추진

-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2.6조원)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 확대 지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원)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확대 장기요양 대상자 90만명 지원
- ▶ (치매관리체계구축 0.1조원)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상담·등록·조기검진, 가족지원 등 치매관리 종합 서비스 제공, 치매치료 관리비 지급 대상 확대
-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5조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중증환자 긴급 치료 병상 설치, 접촉자 생활치료 센터 운영 등
- ▶ (감염병예방관리 1.7조원) 17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코로나19 해외백신 도입, 감염병 지역사회 유행 감시 수행

【코로나19 성과】 상반기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목표 1,300만명 초과 달성(자료: 질병청)

* 상반기 중 65세 이상 고령층, 일부 만성질환자, 특수교육·장애아보육 및 보건교사,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1,535만명에 대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실시 완료

③ (돌봄지원) 아동·노인에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 가정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수당 지급 등 돌봄 안전망 강화

- ▶ (아이돌봄지원 0.2조원)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0.3조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돌봄 등 제공
 - * 독거·거동불편 등 취약노인(약 50만명 추산) 중 92%(46만명) 지원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조원) 만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에 대한 교육비, 보육료 지원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0.2조원)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 가족의 아동 19만명에 지원
-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0.5조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약 전 아동 336만명에 대해 지원

④ 신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벤처·창업 활성화

① (산업경쟁력 강화)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혁신 지원과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신산업 육성 강화

- ▶ (로봇산업기술개발 0.1조원) 로봇산업 핵심기술 개발,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 ▶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구축 0.2조원)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
- ▶ (에너지수요관리핵심 기술 개발 0.1조원) 에너지 다소비 기기의 효율향상 및 에너지 사용 최적화 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건물, 수송 등 소비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강화
- ▶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0.1조원) 미래자동차 요소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최근 3년간('18~'20년) 특허 등록 442건, 매출 1.3조원 창출
- ▶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개발 0.2조원)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 개발, 시스템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및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소재·부품·장비 지원성과】 2년간('19.7월~)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대일(對日)의존도 감소, 소부장 사업 여건 개선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성장 가속화(자료 : 산자부)

- * 불화수소 대일수입액(1~5월) : ('19년) 28.4백만달러 → ('21년) 4.6백만달러 (△83.6%)
- * 100대 품목 대일의존도 : ('19.1~5월) 31.4% → ('21.1~5월) 24.9%
- *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 증가율('19.1분기→'21.1분기) : 20.1% (상장기업 전체평균 12.7%)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K-뉴딜, 신산업, 소부장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18년에 이어 상반기 역대 2위 실적 기록(자료 : 산자부)

- * ① K-뉴딜 : ('20.上) 14.9억불 → ('21.上) 39.4억불(163.4% ↑)
- * ② 신산업 : ('20.上) 38.1억불 → ('21.上) 52.5억불(37.8% ↑)
- * ③ 소부장 : ('20.上) 11.7억불 → ('21.上) 13.4억불(14.7% ↑)
- *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기비) : (신고기준) 71.5% 증가 (도착기준) 57.3% 증가

② (脫탄소 전환 지원) 脫탄소 사회로 조기 이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전환 지원,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 그린산업 적극 육성

-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0.2조원) 주택, 공공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
- ▶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0.3조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녹색 설비 투자를 위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
* 환경산업 424개 기업에 대해 0.2조원, 녹색전환 88개 기업에 대해 297억원 지원
-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0.7조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충전인프라 구축 비용 등 지원
* '21.上 까지 전기차 4만대, 충전인프라 8천개 신규 보급 및 구축
-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0.5조원)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등의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및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친환경자동차 산업동향】'21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는 내수 반기 최대 판매 달성(자료 : 산자부)

* 코로나19 이전 '19.上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전체 자동차 판매의 17.3% 차지
('19.上) 8.1% → ('20.上) 10.0% → ('21.上) 17.3%

»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內 친환경차 등록(93.4만대) 비중은 '16년 1.1%에서 '21.6월말 기준 4.0%로 약 4배 증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 충전 인프라 지속 확충 등이 기여

③ (벤처·창업활성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창업 사업화 지원,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 창업 생태계 조성

- ▶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0.8조원) 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
- ▶ (창업사업화 지원 0.4조원) 예비, 초기, 도약기 등 창업 전주기 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멘토링 제공
* (예비창업패키지) 1,530개사 (초기창업패키지) 900개사 (창업도약패키지) 680개사
(비대면스타트업 육성) 400개사 (글로벌 기업 협업) 200개사
- ▶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융자 2조원) 혁신분야, 그린뉴딜 유망 창업기업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0.9조원)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및 생산공정 혁신, 그린 전환 지원
-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0.2조원)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등 지원하여 원격근무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동향】'21년 상반기 벤처투자자와 벤처펀드 결성은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 기록,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19년 수준을 넘어선 규모(자료 : 중기부)

* 벤처투자(억원) : ('19.上) 19,943 ('20.上) 16,554 ('21.上) 30,730(+1조 4,176억원, 전년동기비 85.6% ↑)

» ICT,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등의 업종이 투자 증가를 견인,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도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많은 61개

* 벤처펀드결성(억원) : ('19.上) 13,647 ('20.上) 11,892 ('21.上) 27,433(+1조 5,541억원, 전년동기비 130.7% ↑)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 중앙재정(중앙부처+공공기관) 관리대상사업* 예산(343.7조원)의 6월 집행률은 68.2% (234.2조원)으로 전년대비 1.7%p 증가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지출,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

- 특히, 일자리(75.3%, 10.2조원), SOC(69.9%, 37.9조원) 등 국민 생활 및 경기회복과 밀접한 사업들은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을 달성

(단위: 조원, %, %p)

구 분	'20년			'21년			전년동기대비
	연간계획 (A)	6월까지 누계(B)	집행률 (C=B/A)	연간계획 (D)	6월까지 누계(E)	집행률 (F=E/D)	집행률 (F-C)
합 계	305.5	203.3	66.5	343.7	234.2	68.2	1.7
중앙부처	261.4	175.6	67.2	293.3	203.2	69.3	2.1
공공기관	44.1	27.7	62.8	50.4	31.0	61.6	△1.2

※ 상반기 조기집행목표 : 중앙재정(중앙부처+공공기관) 63%

● 주요 분야별 집행실적

(단위: 조원, %)

구분	관리대상 규모	6월 집행실적(A)		조기집행 목표(B)		집행률 (A/B)
			(%)		(%)	
일자리	13.6	10.2	75.3	9.1	67.0	112.0
SOC	54.2	37.9	69.9	33.6	62.0	112.8
생활SOC	11.0	7.6	69.5	7.2	65.5	105.6
한국판 뉴딜	22.5	15.8	70.4	15.7	70.0	100.6

[참고] 연도별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연간계획 (본예산+이월액)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금액	진도율	금액	진도율
'16년	279.2	166.2	59.5%	169.7	60.8%
'17년	281.7	163.5	58.0%	166.3	59.0%
'18년	280.2	162.6	58.0%	174.1	62.1%
'19년	291.9	178.1	61.0%	190.7	65.4%
'20년	305.5	189.6	62.0%	203.3	66.5%
'21년	343.7	216.5	63.0%	234.2	68.2%

참고 기관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 중앙부처 (예산+기금)

(단위: 억원, %, 누계기준)

구 분	'21년			
	연간계획(A)	6월 계획	6월 실적(B)	집행률(B/A)
• 중앙부처	2,933,309	1,873,752	2,032,004	69.3
교육부	617,412	391,208	399,634	64.7
국토교통부	519,866	317,393	335,171	64.5
행정안전부	490,487	324,209	356,869	72.8
보건복지부	295,484	204,146	211,359	71.5
중소벤처기업부	144,767	93,335	130,245	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4,195	82,303	87,037	76.2
환경부	106,862	67,770	74,030	69.3
산업통상자원부	102,799	69,978	81,642	79.4
국방부	97,685	50,690	46,056	47.1
방위사업청	97,213	51,857	55,349	56.9
농림축산식품부	68,684	44,026	47,412	69.0
고용노동부	66,650	43,619	50,191	75.3
해양수산부	52,498	33,114	37,948	72.3
문화체육관광부	45,624	27,945	28,185	61.8
산림청	18,799	12,135	13,459	71.6

■ 공공기관

(단위: 억원, %, 누계기준)

구 분	'21년			
	연간계획(A)	6월 계획	6월 실적(B)	집행률(B/A)
• 공공기관	503,507	291,172	310,198	61.6
한국토지주택공사	200,571	107,901	118,788	59.2
국가철도공단	59,346	36,142	36,769	62.0
한국전력공사	50,499	29,239	29,267	58.0
한국도로공사	44,756	26,854	27,788	62.1
한국농어촌공사	24,926	16,252	17,082	68.5
한국수력원자력(주)	19,816	12,802	13,335	67.3
한국수자원공사	14,915	9,396	9,501	63.7

※ 관리대상사업 제도 개요

- 목적: 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②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관리대상: 47개 중앙행정기관(일반+특별회계),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
- 관리방법: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 진도율 관리(재정관리점검회의), 각 부처에서 사업별 관리

〈총지출 vs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범위('21년 기준)〉

구 분	총지출(본예산)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대상	예산 규모	대상	예산 규모
합 계	-	558.0조원	-	343.7조원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58개 기금 58개	558.0조원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금 40개	293.3조원
공공기관	-	-	33개	50.4조원

※ 상세 집행실적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에서 확인가능

3. 재정수지

◆ 6월말,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기금수입 등 수입증가로 적자폭은 전년대비 개선(+42.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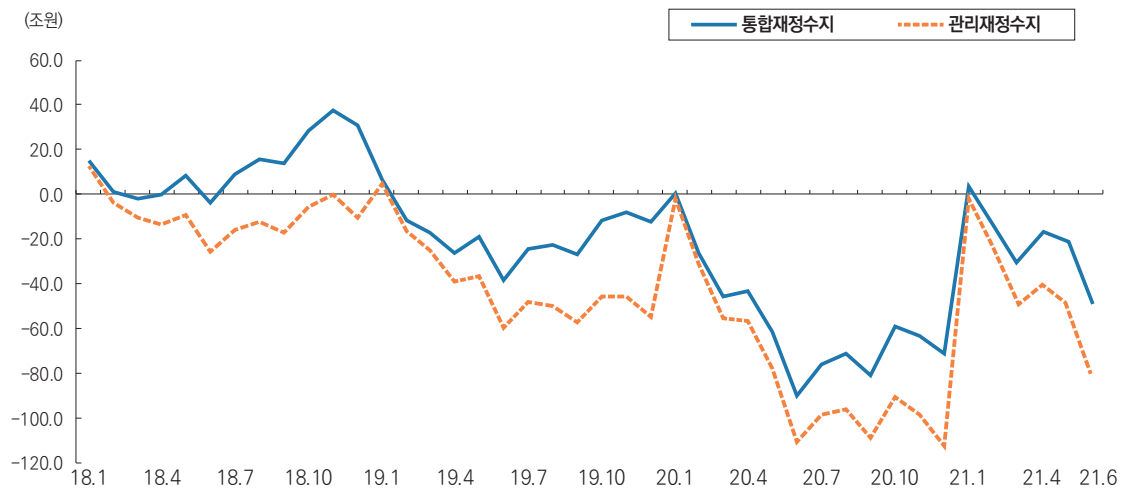
● '20.6월 누계 $\Delta 90.0 \rightarrow$ '21.6월 누계 $\Delta 47.2$ 조원

- (통합재정수지) 6월말, 통합재정수지($\Delta 47.2$ 조원)는 국세·세외·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적자 개선(+42.8조원)
-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전년대비 +12조원)를 제외한 6월말 관리재정수지($\Delta 79.7$ 조원)도 전년대비 적자 개선(+30.8조원)

(단위: 조원, %, %p)

	'20년						'21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6월 (당월, C)	6월 (누계, D)	진도율		1차추경 (G)	6월 (당월, H)	6월 (누계, I)	진도율 (J=I/G)	증감		진도율 (J-E)
					추경 (E=D/A)	결산 (F=D/B)					6월 (H-C)	누계 (I-D)	
■ 총수입(A)	470.7	478.8	27.8	226.0	48.0	47.2	483.0	37.2	298.6	61.8	9.4	72.6	13.8
■ 총지출(B)	554.7	549.9	56.5	316.0	57.0	57.5	572.9	63.9	345.8	60.4	7.4	29.8	3.4
■ 통합재정수지 (C=A-B)	$\Delta 84.0$	$\Delta 71.2$	$\Delta 28.7$	$\Delta 90.0$			$\Delta 89.9$	$\Delta 26.7$	$\Delta 47.2$		2.0	42.8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D)	34.6	40.8	3.9	20.5			36.5	4.5	32.5		0.6	12.0	
■ 관리재정수지 (E=C-D)	$\Delta 118.6$	$\Delta 112.0$	$\Delta 32.6$	$\Delta 110.5$			$\Delta 126.4$	$\Delta 31.2$	$\Delta 79.7$		1.3	30.8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4. 국가채무(중앙정부)

◆ 1~6월 국고채 발행액은 106.0조원으로, 年발행한도(186.3조원)의 56.9%를 평균조달 금리 1.68%로 안정적 소화

-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1~6월 중 국고채 순투자 21.1조원 달성

* 6월 기준 국고채 잔액 중 외국인 보유 비중 17.7%

◆ 국고채권 상환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감소(△1.7조원), 주택거래에 따른 주택채 발행은 전월대비 감소, 상환은 전월대비 증가,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6월 국가채무 잔액 : 898.1.조('21.3월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 : 938.4조원)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단위: 조원)

	'21년(잠정)		
	1차추경	5월	6월
■ 중앙정부 채무	938.4	899.8	898.1
• 국채*	936.0	896.6	894.9
- 국고채권	849.8	806.2	804.3
- 국민주택채권	74.8	80.6	80.8
- 외평채권(외화)	11.4	9.8	9.8
• 차입금	2.3	2.6	2.5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7	0.7

*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 포함

[참고] 국채 세부내역('21년 6월 말 기준) 월말 기준 환율 적용

(단위: 조원)

		국채합계			국고채권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2020		194.9	75.5	815.2	174.5	59.2	726.8	1.7	-	9.5	18.7	16.2	78.9
	1	13.9	1.3	709.0	12.5	0.2	623.8	-	-	8.5	1.4	1.1	76.8
	2	14.3	1.1	722.4	12.6	0.1	636.3	-	-	8.7	1.6	1.0	77.4
	3	16.6	10.3	728.7	15.0	7.8	643.5	-	-	8.7	1.6	2.5	76.4
	4	16.1	1.4	743.3	14.7	0.1	658.1	-	-	8.7	1.4	1.3	76.5
	5	18.0	0.2	761.3	16.7	0.2	674.6	-	-	8.9	1.3	0.0	77.8
	6	18.2	18.2	761.0	16.7	15.7	675.7	-	-	8.6	1.5	2.5	76.7
2021		115.8	36.4	894.9	106.0	28.5	804.3	-	-	9.8	9.8	7.9	80.8
	1	17.0	0.3	832.1	15.6	0.3	742.0	-	-	9.7	1.4	-	80.3
	2	19.1	1.3	849.8	17.7	0.3	759.4	-	-	9.7	1.4	1.0	80.7
	3	19.0	10.4	858.5	17.2	7.2	769.3	-	-	9.8	1.8	3.2	79.3
	4	19.8	1.2	876.9	18.2	0.2	787.3	-	-	9.7	1.7	1.0	80.0
	5	20.9	1.4	896.6	19.1	0.3	806.2	-	-	9.8	1.8	1.1	80.6
	6	20.0	21.7	894.9	18.3	20.2	804.3	-	-	9.8	1.7	1.5	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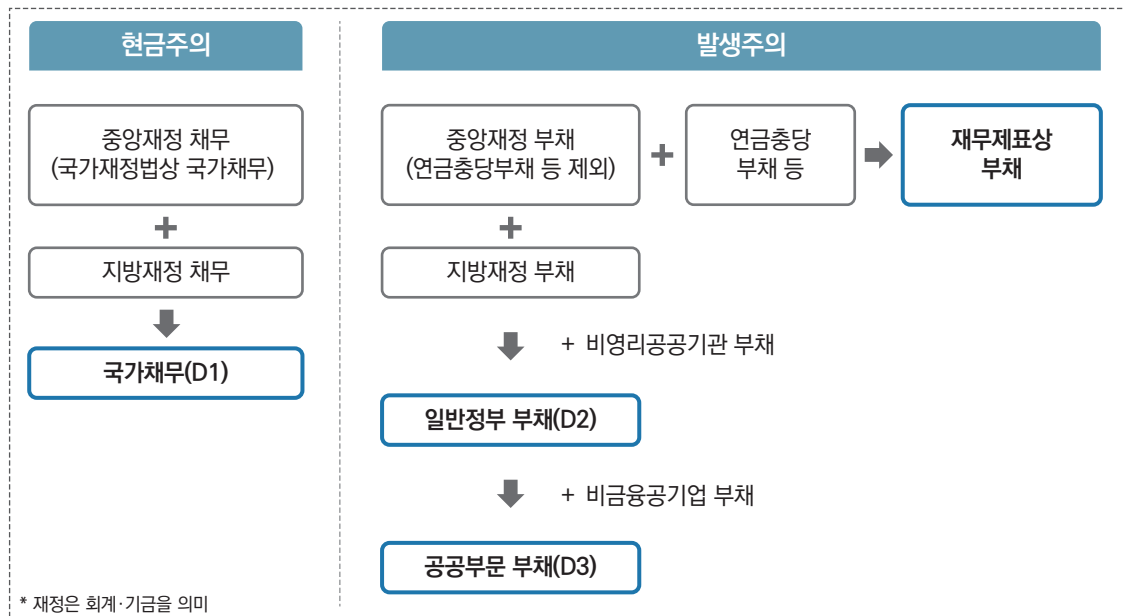
참고 1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

*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D1) 산출시 활용

*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 D3 산출시 활용

유형	'19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723.2조원 ('19년, 37.7%)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810.7조원 ('19년, 42.1%)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132.6조원 ('19년, 58.9%)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참고 2 부채 규모 상세 비교('19년 기준)

(단위: 조원)

분 류				국가채무 (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합 계 (A+B-C)				723.2	810.7	1132.6
공 공 부 문	일반 정부 (A)	중앙 정부	회계·기금	699.0	730.5	730.5
			비영리공공기관(222개)	-	50.4	50.4
			내부거래	-	△13.2	△13.2
		중앙정부 부채		699.0	767.6	767.6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243개)	25.1	47.6	47.6
			지방교육자치단체(17개)	1.9	7.2	7.2
			비영리공공기관(95개)	-	0.9	0.9
			내부거래	-	△0.8	△0.8
		지방정부 부채		27.1	54.9	54.9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		△2.8	△11.8	△11.7
	비금융 공기업 (B)	중앙(111개)		-	-	359.9
		지방(56개)		-	-	43.7
		내부거래		-	-	△7.8
		비금융공기업 부채		-	-	395.8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C)			-	-	△73.9	

참고 3 일반정부 부채(D2) 국제비교

(단위: GDP대비, %)

구분	일반정부 부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호주	29.8	34.1	35.6	39.5	40.7	42.7	43.6	43.5	45.8
오스트리아	96.8	104.5	101.6	109.3	108.9	108.5	102.4	96.8	95.0
벨기에	111.7	121.1	118.8	130.8	126.5	127.8	120.9	118.3	120.9
캐나다	89.4	93.5	90.4	92.4	98.0	98.4	95.2	93.8	94.3
체코	47.5	56.7	56.1	55.0	51.7	47.5	43.3	39.7	37.7
덴마크	60.1	60.6	56.7	59.1	53.4	55.4	52.8	51.0	51.7
에스토니아	9.4	13.0	13.5	13.7	12.6	13.6	13.1	13.0	13.4
핀란드	56.8	63.5	64.9	71.0	74.6	75.6	73.7	72.7	72.7
프랑스	103.9	111.9	112.4	120.1	120.9	124.2	123.3	121.7	124.4
독일	86.5	88.8	84.2	84.0	80.1	77.4	72.7	69.5	68.1
그리스	114.5	170.0	186.2	187.3	187.2	191.8	195.0	201.2	205.1
헝가리	95.8	99.1	98.2	101.1	99.1	98.9	93.2	86.6	83.3
아이슬랜드	94.4	92.1	84.2	77.0	70.1	64.4	63.4	62.1	63.2
아일랜드	114.5	132.1	133.6	122.5	89.7	86.2	77.1	75.0	69.4
이스라엘	68.9	68.5	67.1	65.7	63.8	62.1	60.6	60.9	60.0
이탈리아	118.8	137.5	145.0	158.0	158.9	156.2	153.2	147.8	155.8
일본	201.8	209.2	212.4	217.9	216.5	223.0	222.2	224.2	225.3
한국	33.1	35.0	37.7	39.7	40.8	41.2	40.1	40.0	42.1
라트비아	50.1	49.3	46.9	51.7	47.2	50.8	47.8	46.3	47.7
리투아니아	45.7	51.2	48.8	52.6	53.3	50.9	47.0	40.7	44.5
룩셈부르크	28.0	29.7	30.2	30.7	30.5	27.9	29.7	28.9	30.0
네덜란드	73.8	79.6	79.0	83.4	79.7	77.7	70.9	66.0	62.5
뉴질랜드	40.2	41.3	40.3	40.5	40.2	37.7	35.7	34.0	32.6
노르웨이	34.7	36.0	36.6	35.1	40.5	44.5	44.9	45.6	46.8
폴란드	62.2	65.6	66.4	71.4	70.2	73.0	68.7	66.8	63.4
포르투갈	111.5	139.4	142.8	152.8	150.2	146.0	145.1	137.8	136.8
슬로바키아	51.5	60.9	65.5	68.0	66.6	68.1	65.9	63.8	63.5
슬로베니아	51.4	62.0	80.1	99.6	102.8	97.6	89.4	84.0	86.2
스페인	78.6	93.5	106.6	119.5	117.1	117.4	115.8	114.5	117.3
스웨덴	47.3	47.7	50.3	57.3	55.1	54.6	51.9	50.5	46.5
스위스	41.8	42.4	41.6	41.8	41.9	40.6	41.4	39.4	38.1
영국	103.5	107.6	103.4	113.3	112.7	119.9	117.1	113.9	117.3
미국	99.6	103.1	104.6	104.3	104.4	106.4	105.6	106.6	108.4
OECD 평균	101.6	107.6	108.8	111.7	111.0	112.1	109.8	108.7	110.0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08('20.12월)

**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II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2. 연기금투자물 운용
3. 보증채무
4. 정부출자
5.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1. 국유재산

◆ 6월말 국유재산(1,165.2조원)은 전월대비 2조 증가

- 행정재산(862조원, 74.0%) 0.8조원, 일반재산(303.2조원, 26.0%)이며, 유가증권 매입 0.7조원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모두 증가

*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단위: 조원, 잠정)

구 분		'19년	'20년	'21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1,125.0	1,151.5	1,164.2	1,158.8	1,160.0	1,163.4	1,163.2	1,165.2
행 정 재 산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km ²)	456.1 (4,999) (24,370)	476.8 (5,047) (24,427)	489.5 (5,066) (24,441)	489.7 (5,067) (24,446)	489.6 (5,067) (24,465)	489.7 (5,068) (24,473)	489.8 (5,069) (24,478)	490.0 (5,074) (24,484)
	건 물	70.9	74.0	72.6	72.6	72.8	73.1	73.3	73.7
	공작물	287.5	285.7	282.8	285.8	285.9	287.7	287.3	287.5
	기계기구	1.0	0.9	0.9	0.9	0.9	0.9	0.9	0.9
	임목죽	5.8	5.4	5.5	5.5	5.5	5.5	5.5	5.5
	선박·항공기	2.8	3.0	2.2	2.9	2.9	2.9	2.9	2.2
	유가증권	-	-	-	-	-	-	-	-
	무체재산	1.1	1.2	1.2	1.3	1.3	1.3	1.5	1.5
	소 계	825.2	847.0	855.3	858.7	858.8	861.1	861.3	862.0
일 반 재 산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km ²)	28.7 (726) (788)	30.2 (770) (813)	29.9 (768) (814)	30.9 (771) (839)	31.1 (773) (816)	31.1 (775) (840)	31.1 (776) (816)	31.6 (777) (817)
	건 물	1.8	1.9	1.9	1.9	1.9	2.0	2.0	2.0
	공작물	0.1	0.1	0.1	0.1	0.1	0.1	0.1	0.1
	기계기구	-	-	-	-	-	-	-	-
	임목죽	2.2	2.2	2.2	2.2	2.2	2.2	2.2	2.2
	선박·항공기	-	-	-	-	-	-	-	-
	유가증권	267.0	270.0	274.7	265.0	265.8	266.9	266.5	267.2
	무체재산	-	-	-	-	-	-	-	-
	소 계	299.8	304.5	308.9	300.2	301.2	302.3	302.0	303.2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청·관사, 도로, 하천 등
-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 (국유재산 수입) 6월 국유재산 수입 2,401억원

- 토지, 건물 등의 매각대(1,330억원), 재고자산(674억원) 등 전월대비 모두 증가(924억원)

* 안양 웅창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50억원), 영등포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40억원) 등

(단위: 억원, 잠정)

구 분	'19년	'20년	'21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37,236	3,090	2,634	2,510	2,815	2,762	1,477	2,401
• 매각대	28,478	2,652	2,201	2,145	2,640	2,454	1,262	2,009
- 토지, 건물 등	20,535	1,621	2,183	1,625	1,940	1,238	945	1,330
- 기타고정자산	578	5	1	1	1	12	4	5
- 재고자산	7,363	1,026	17	518	699	1,205	312	674
- 유동자산	2	0	0	0	0	0	1	0
• 변상금	760	61	44	30	27	37	48	40
• 대여료	7,998	377	389	335	148	271	167	352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축,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711, 712, 721, 722, 723목)

2)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포함) 매각수입(713목)

3) 재고재산의 매각수입(731목)

4)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 수입(732목)

5)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571목)

6)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511, 512목)

■ (국유재산 취득·처분) 6월 기준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4,987억원으로 처분 총액(8,486억원)을 16,501억원 초과

- (취득) 공공자금 및 여유자금 운용으로 인한 유가증권 취득, 조달에 의한 취득 등으로 24,987억원
- (처분) 주식소각, 공공자금 운용 등으로 처분은 8,486억원

(단위: 억원, 잠정)

구 분			'19년	'20년	'21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토지	취득	49,934	33,361	9,111	1,742	2,511	1,015	1,710	7,884
		처분	23,505	13,058	1,265	2,369	546	1,099	2,482	2,961
	건물	취득	50,496	29,118	1,190	718	2,183	861	1,788	4,337
		처분	1,884	23,346	10	1	3	66	1,226	482
	기타	취득	333,596	22,830	17,177	15,852	13,051	21,227	6,245	12,767
		처분	236,478	14,278	199	5,475	656	852	681	5,043
	계	취득	434,027	85,308	27,478	18,312	17,745	23,103	9,743	24,987
		처분	261,866	50,682	1,474	7,846	1,205	2,125	4,389	8,486
매매	토지	취득	7,928	1,578	281	812	806	308	544	421
		처분	16,300	999	1,254	2,350	538	882	1,807	400
	건물	취득	38,957	4,707	1,000	604	1,320	300	151	1,930
		처분	435	8	8	0	1	6	28	124
	기타	취득	268,230	13,563	16,791	15,611	12,952	17,909	5,353	12,512
		처분	236,105	2,992	198	5,475	655	951	480	4,982
	계	취득	315,115	19,847	18,071	17,027	15,079	18,517	6,049	14,863
		처분	252,840	3,999	1,461	7,825	1,194	1,838	2,314	5,505
교환	토지	취득	414	123	0	4	5	8	30	0
		처분	444	65	0	12	5	8	32	0
	건물	취득	29	0	0	8	0	0	0	0
		처분	26	0	0	0	0	0	0	0
	기타	취득	0	0	0	0	0	0	0	0
		처분	0	0	0	0	0	0	0	0
	계	취득	443	123	0	12	5	8	30	0
		처분	550	65	0	12	5	8	32	0
기타	토지	취득	41,592	31,660	8,830	927	1,700	699	1,135	7,463
		처분	6,761	11,994	11	8	3	214	643	2,561
	건물	취득	11,511	24,411	190	105	863	561	1,637	2,407
		처분	1,423	23,338	2	1	2	65	1,199	358
	기타	취득	65,365	9,267	387	241	98	3,318	891	255
		처분	372	11,286	1	0	2	0	201	61
	계	취득	118,468	65,338	9,407	1,273	2,661	4,578	3,664	10,125
		처분	8,556	46,618	14	9	6	279	2,043	2,980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취득의 경우는 매입, 처분의 경우는 매각

2) 취득과 처분 모두 교환 및 환지

3) 취득의 경우는 신규 등록과 무상취득, 처분의 경우는 멸실과 양여

2. 연기금 투자폴 운용

◆ 2분기 연기금투자폴 운용 결과, 채권형은 약세를 보였으나 초과수익률 달성, 수탁고는 전분기 대비 증가

- (수익률) 금리 상승*으로 채권형 수익률은 약세를 보였으나, 주식시장 호조**로 주식형 수익률은 양호

* 국고채 3년물 금리 : ('21년 1분기 말) 1.13% → (2분기 말) 1.45%

** KOSPI 지수 : ('21년 1분기 말) 3,061.42pt → (2분기 말) 3,296.68pt

- (수탁고) 기금 집행을 대비한 대기성자금 증가로 MMF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 (3조 7,353억원)

〈투자폴 수탁고 추이〉

(단위: 억원, 평잔)

	'19.4/4	'20.1/4	'20.2/4	'20.3/4	'20.4/4	'21.1/4 (A)	'21.2/4 (B)	증감 (B-A)
■ 총수탁고*	229,939	235,704	256,736	284,022	305,348	304,624	341,977	37,353
- MMF	62,362	66,284	86,431	99,682	117,274	101,357	120,678	19,321
- 채권형	82,819	88,303	87,536	105,560	110,107	122,393	132,507	10,114
- 혼합형	78,417	71,812	73,300	69,572	69,004	71,685	79,126	7,441
- 주식형(국내)	2,473	3,068	3,406	3,360	3,300	3,403	3,704	301
- 주식형(해외)	2,718	4,279	4,875	4,829	4,804	5,003	5,205	202
- 기타	1,150	1,959	1,188	1,020	859	782	759	△23

* 수탁고에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은 제외

〈투자폴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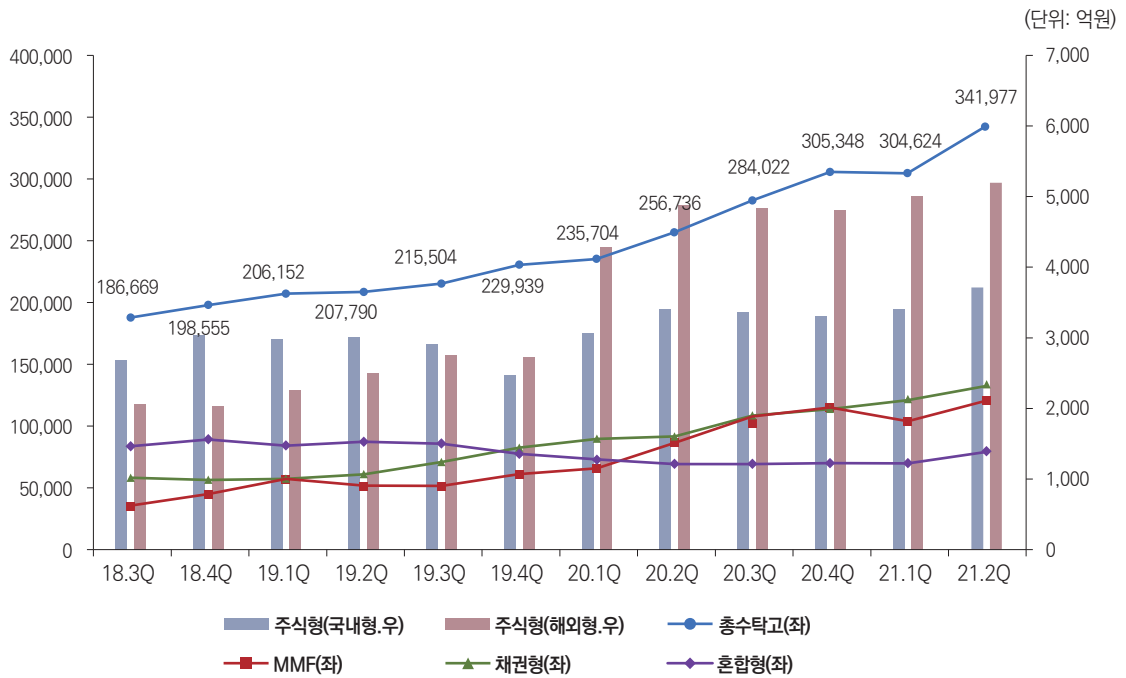
(단위: %, %p)

	'19.4/4	'20.1/4	'20.2/4	'20.3/4	'20.4/4	'21.1/4	'21.2/4
- MMF	1.48 (0.08)	1.45 (0.11)	1.25 (0.24)	0.76 (0.08)	0.67 (0.07)	0.71 (0.08)	0.69 (0.10)
- 채권형	1.00 (△0.03)	2.65 (△0.53)	4.67 (1.01)	2.20 (0.62)	1.05 (△0.03)	0.02 (△0.01)	△0.77 (0.09)
- 혼합형	1.32 (0.09)	△2.49 (△0.26)	3.56 (△0.08)	2.29 (0.22)	4.86 (0.85)	1.95 (0.39)	1.49 (0.01)
- 주식형(국내)	7.78 (1.12)	△19.53 (0.29)	18.69 (△0.68)	11.11 (0.67)	26.61 (2.25)	7.61 (1.04)	6.33 (△0.56)
- 주식형(해외)	6.27 (0.17)	△17.61 (0.27)	15.50 (△0.12)	5.98 (△0.13)	7.44 (△0.24)	8.82 (1.07)	6.68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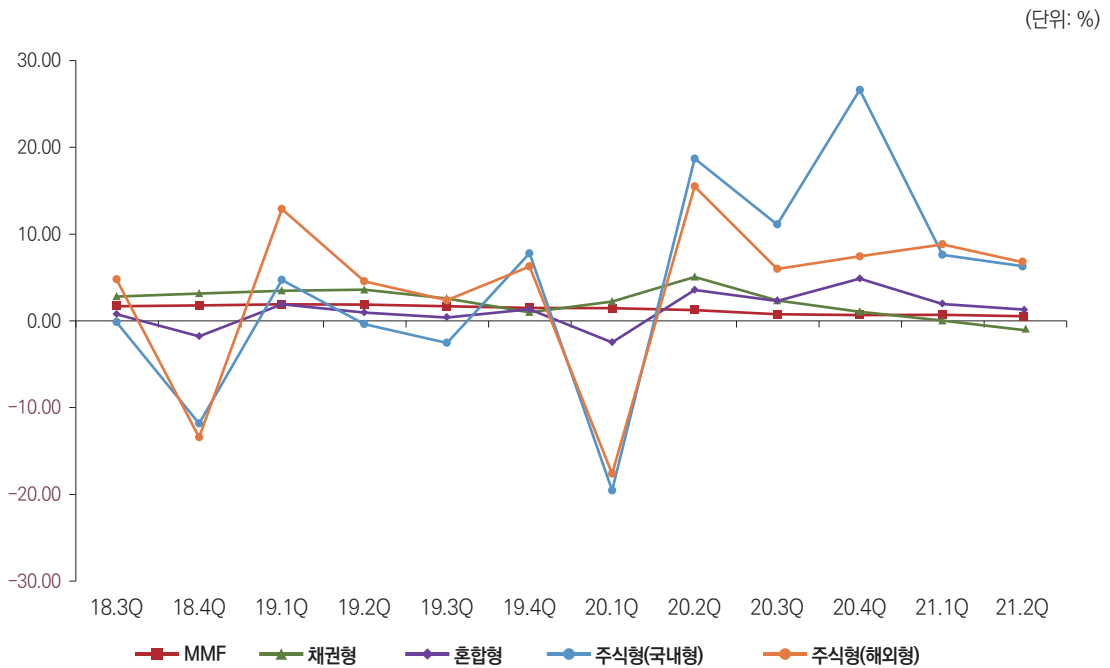
* 괄호안은 BM(BenchMark) 대비 초과수익률, 유형별 BM은 유형내 통합펀드들의 BM수익률을 펀드규모로 가중 평균한 값

** MMF와 채권형은 연환산 수익률, 혼합형과 주식형은 기간 실현수익률

〈연기금투자자 수탁규모 추이〉



〈연기금투자자 수익률 현황〉



3. 보증채무

- ◆ 6월말 보증채무는 11.7조원 규모이며 각 채권은 일정 규모 유지
-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은 '21.8월 채무 전액 상환 예정

(단위: 조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4월	'21년 5월	'21년 6월
■ 보증채무	24.2	21.1	17.0	14.8	12.5	11.7	11.8	11.9	11.7	11.7	11.7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¹⁾	12.6	9.7	5.9	3.9	1.5	0.8	0.8	0.8	0.8	0.8	0.8
- 장학재단채권 ²⁾	11.7	11.4	11.1	10.9	10.5	10.4	10.4	10.5	10.3	10.3	10.3
- 수리자금	0.03	0.02	0.01	-	-	-	-	-	-	-	-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	-	-	-	0.5	0.5	0.6	0.6	0.6	0.6	0.6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0.2조원

2) 한국장학재단채권: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1년 보증한도 1.5조원, 5월말 기준 2,600억원 발행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간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1년 보증한도 40.0조원('20년 발행분 차감), 5월말 기준 700억원 발행

4. 정부출자

- ◆ 6월말 정부출자금(156조 7,358억원)은 고속도로 건설 지원을 위한 도로공사 출자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

(단위: 억원)

기관분류	'21년 5월말			'21년 6월말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공기업	380,804	764,220	1,145,024	380,881	776,586	1,157,467
준정부기관	41,578	1,066	42,644	41,578	1,066	42,644
기타공공기관	325,336	36,119	361,455	326,936	36,119	363,055
공공기관 외	2,581	1,611	4,193	2,581	1,611	4,193
합계	750,299	803,016	1,553,315	751,976	815,382	1,567,358

-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총 39개 기관

(단위: 개)

구 분	SOC	에너지	금융	기타	계
기관수	14	7	7	11	39
업종	공항, 철도, 항만, 주택, 수자원	가스, 전력, 광물, 석탄, 석유, 송유관	은행, 주택금융, 해운금융	농수산물 유통, 관광, 조폐 등	

5.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 '20년~'21.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총 31건, 타당성재조사 총 7건 완료

- (예타) 총 24건 중 SOC분야 18건(58.1%), 건축분야 7건(22.6%), 정보화분야 3건(9.7%), 기타재정분야 3건(9.7%)
- (타재) 총 7건 중 SOC분야 5건, 건축분야 2건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 31건 중 통과 23건(74.2%), 미통과 6건(25.8%)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0년~'21.6월말 기준)〉

부처	여부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억원)	B/C	AHP
국토부	통과 23건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도로개설(봉래산터널)	2,074	1.00	0.545
국토부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	986	1.02	0.555
국토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8,881	0.83	0.518
행복청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3,998	1.77	0.674
행안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658	1.41	0.758
문화부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871	2.46	0.686
산업부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	9,988	(시1)1.11 (시2)1.01	(시1)0.651 (시2)0.585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526	1.39	0.654
복지부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3,328	1.56	0.741
국토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25,786	0.81	0.542
국토부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11,955	0.46	0.559
농림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4,146	0.85	0.532
국토부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 사업	2,299	1.00	0.644
해수부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 재개발사업	6,061	1.24	0.650
문화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사업	610	0.93	0.639
국토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6,711	0.87	0.503
농림부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2,076	0.96	0.637
국토부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사업	1,162	0.95	0.590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17,695	0.82	0.508
농림부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	-	조건부 추진
해경청		방제정 건조	735	1.29	0.729
교육부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5,312	0.96	0.56
과기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3,263	1.11	0.589

부처	여부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억원)	B/C	AHP
국토부	미통과 8건	부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10,754	0.85	0.497
해수부		부산항 제2신항 건설	124,284	0.92	0.497
국토부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매송) 확장사업	철회		
국토부		서해안고속도로(매송~안산) 확장사업	철회		
복지부		대전의료원 설립	철회		
복지부		서부산의료원 설립	철회		
국토부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	철회		
산업부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4,643	0.35	0.415

■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 7건 중 통과 4건(57.1%) 미통과 3건(42.9%)

〈타당성재조사 결과(‘20년~’21.6월말 기준)〉

부처	통과 여부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억원)	B/C	AHP
해수부	통과 4건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841	2.68	0.716
국토부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9,017	0.85	0.571
국토부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공사	2,560	(시1)0.75 (시2)0.77	(시1)0.512 (시2)0.519
행복청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986	1.61	0.687
농림부	미통과 3건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307	0.44	0.433
농림부		안동도매시장	철회		
행복청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공사	2,577	0.66	0.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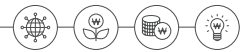
III

주요 재정 이슈

1. Post 코로나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원격교육 발전방향
2.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에 대응한 주요국의 재정동향 및 시사점
3.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R&D 투자전략 및 시사점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주요내용
5. 「국민공감예산」 편성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6.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실행방안 개선방안
7. 차세대 디브레인, 데이터 기반 행정과 AI 정부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



POST 코로나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원격교육 발전방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서비스본부장 변태준



거대한 도전이었다. '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은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교육 현장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 하였던 '20년 3차례의 개학 연기, 4월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면서, 교육 관계자들 모두 '교육은 중단될 수 없다' 라는 목표 아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중심에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이 있었다.

원격교육이 교육 현장의 학업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으로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현장 원격교육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온 과정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도전이었고,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하여 우리는 현장의 교육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를 극복 하여 왔다.

전통적 개념의 원격교육과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전통적으로 원격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간적인 거리를 두고 분리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¹⁾. 이를 학교 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교수자와 학습자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수업에서와 같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를 의미한다(Keefan, 1995; Simonson et al., 2002). 즉, 전통적 관점에서의 원격교육은 공간의 분리를 중심으로 한 원격교육이었음에 비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교육은 물리적 공간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넘어 가상 공간의 활용(이러닝, 웹기반 교육 등)을 전제로 한 원격교육으로 설명될 수 있다. 상호 작용 역시 교수내용의 전달을 중심으로 한 원격교육에서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교수자-학습내용-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강조되었고 상호작용 역시 에듀테크의 발전을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한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통적인 원격교육에 비하여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은 공간적인 거리를 극복하는 원격교육을 넘어, 학교의 교육활동과 강하게 결합되어 학습자를 지

1) 2020 KERIS이슈리포트(2020), 포스트코로나시대 원격교육연수의 재개념화 및 미래 방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이 전통적인 개념의 원격교육과 가장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원격교육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이 남긴 시사점

'20년 상반기부터 진행되었던 원격교육은 우리에게 미래교육을 준비함에 있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들을 남겼다. 첫째,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 비하여, 초·중등 학교현장에서는 온라인 교육보다 대면 교육이 중심이 되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교육을 통하여 교수-학습 활동과 연계되는 원격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기에 코로나19가 종식 된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활동과 온라인이 강하게 결합되는 원격교육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온라인 개학 초기에 원격교육을 즉시 도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인프라 확장과 함께 현장의 준비도가 관건이었다.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는 원격교육을 활용하기 위한 장비 및 도구의 활용 방법 등 관련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을 빠르게 습득 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 증가와 함께 원격교육이 내용 중심의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강화,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 하여 제공,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실시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과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의 축적은 향후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교육이 현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현장에서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역량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에듀테크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 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진행되었던 원격교육은 대면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까지는 지원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원격교육 운영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에듀테크는 이러한 요구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에 향후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에듀테크

가 활발하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에듀테크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현황 및 학습 패턴 분석을 가능 하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학생별 학습 특성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보다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에 학생 한명 한명이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강력한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학교 교육을 넘어 개인 생애주기와 함께 하는 원격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식 기반사회에서는 자료를 탐색하고 융합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가공하여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격교육은 변화가 자유롭고 즉시성을 가지는 디지털의 속성을 활용하기에 학교 교육 이후에도 정보를 빠르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개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샘터’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 바가 있다. 지식샘터는 교사 연수 지원 플랫폼인데 계획되어지고 구조화된 콘텐츠 제공 방식의 대규모 연수가 아닌 소규모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연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교육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 방법·사례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정보기기 활용법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요구가 일치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연수가 운영될 필요가 있었는데, ‘지식샘터’ 운영을 통하여 이의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였다. 미래 사회에서는 성인 학습자인 개인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평생에 걸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역할의 큰 일부를 원격교육이 맡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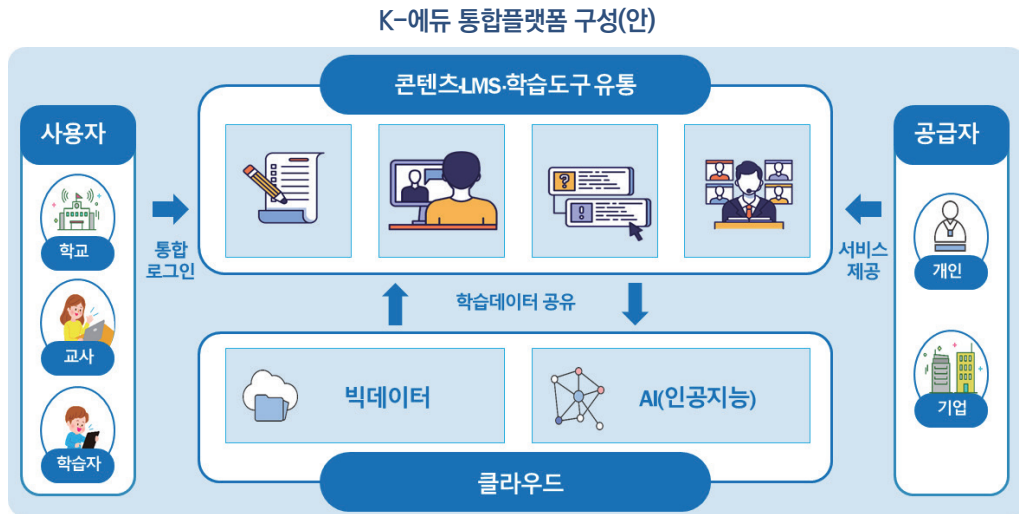
교육 생태계의 변화와 미래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

산업사회에서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중요하였고 이의 양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지식의 전달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시되고 있고 특히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처방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학습자 처방의 경우 그 분석의 범위 또한 과거의 몇몇 정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학습자가 가지는 특성 및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생태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교육이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개인별 특성에 맞춘 원격교육이 아닌 ‘평균’을 지향하는 원격교육²⁾이 진행 되었기에 한계가 있었고,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 습득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학습자의 오프라인 교육 활동과 온라인 교육활동이 연계되어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는 에듀테크가 적절하게 선택되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활용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구축이 필요하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와 기능이 통합되는 플랫폼인 ‘K-에듀 통합 플랫폼(가칭)’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교육지원을 위한 K-에듀 통합플랫폼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서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는 이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20. 10.~’21. 6.에 추진하였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 및 교육 생태계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특히 팬데믹 등 국가 비상 상황시에도 중단 없는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전통적인 원격교육의 역할을 넘어 교수-학습 활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이 미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 동아일보(2020. 5.1) “원격수업 혼란 딛고 안정 찾아..국가차원 ‘원플랫폼’ 구축 필요”

학습자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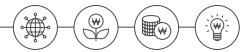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이 남긴 시사점에서 현장(교사)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와 함께 학습자가 지식을 함께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적극적으로 통합되어 학습자의 정보화 역량을 높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OECD PISA 2018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교에서의 디지털기기 접근성 지수는 OECD 평균보다 높으나 가정에서의 접근성 지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 학교에서의 디지털기기 접근성은 2015 조사에 비하여 높아졌는데(22위/30개국 중, 2015년 → 15위/31개국 중, 2018년) 이는 학교에서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이전보다 학생들이 접할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원격교육은 학교 현장 이외의 환경에서도 이용되어야 하기에 가정에서의 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 개인별 디지털 기기 접근성의 차이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학생 개개인의 디지털기기 접근성 및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미래사회를 대비함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왔던 것들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인지되고 구체화 된 기회이기도 하였고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의 변화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공감하고 대비하였으면 한다

3) -학교에서의 디지털기기 접근성 지수 : 6.345(OECD 평균 6.277, 2018년)
 -가정에서의 디지털기기 접근성 지수 : 7.645(OECD 평균 8.169, 2018년)
 ※ 출처 : OECD PISA 2018을 통해본 한국의 교육정보화 수준과 시사점, KERIS이슈리포트(2020)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에 대응한 주요국의 재정동향 및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실장 김현석



I. 탄소중립 추진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전망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이 글로벌 아젠다로 대두됨
 - 2015년 파리협약 체결하에 세계 196개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방안(NDC)이 수립·제출되고 2021년 1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신기후체제로 돌입
 - 2019년 9월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을 대비해 2050년 탄소중립(Net-Zero Emissions)을 위한 LEDs 수립을 각국에 촉구
 - 2021년 4월 미국의 주도로 4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¹⁾가 개최되었으며, 선진국들 위주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2030년 감축목표 강화안*을 제시

*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은 강화된 감축목표 제시;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기존 목표 재확인; 한국은 금년 내 상향된 감축목표 제시를 약속

- 2021년 7월 기준 12개 국가 및 연합*이 탄소중립 추진을 법제화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이 법제화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됨²⁾

* 독일, 스웨덴, EU,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 향후 글로벌 규제 강화(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등) 및 민간 경영활동의 변화(RE100 참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확대 등)가 가속화될 전망
- 탄소중립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목표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신규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탄소집약적자본을 저탄소자본으로 대체하기 위해 향후 10년간(2021-30년)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표 1〉 참조)
 - 공공부문의 경우, 평균적인 한 해 GDP 규모의 0.5-4.5% 수준에 해당하는 신규투자가 향후 10년간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추정치는 2%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됨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30년(2021-50년) 동안 필요한 전체 공공투자 규모 중 2021-30년간 소요되는 금액이 약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1) U.S. Department of State, Leaders Summit on Climate, <https://www.state.gov/leaders-summit-on-climate/>, 검색일자: 2021. 7. 31.

2) Energy & Climate Intelligence Unit (ECIU), Net Zero Tracker, 2021 Scorecard, <https://eciu.net/netzerotracker>, 검색일자: 2021. 7. 31.

- 부문별로 봤을 때 전환부문의 투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건축, 수송,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최종사용(end-use)에 관련된 투자도 중요
-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계통 보강, 친환경차 충전설비 보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등과 같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그 특성상 초기투자가 필요하며, 2050년까지의 시계하에서 2040년까지 신규투자가 계속해서 큰 규모로 이어지다가 이후 점차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

〈표 1〉 기후변화 대응목표별 향후(2021-30년) 전세계 신규투자규모 추정치

출처	부문	분석기간	공공투자규모 (GDP 대비 %)	전체투자규모 (GDP 대비 %)	기후변화 대응목표
OECD(2017)	전체	2016-30	1.9	6.3	2.0℃
McCollum et al.(2018)	Energy	2016-50	2.1 (구간: 0.4-4.4)	7.1 (구간: 1.3-14.6)	1.5℃
IEA(2021)	Energy	2021-30	2.7	9.9	2050년 탄소중립
EIB(2021)	전체 (EU로 국한)	2021-30	2.1	4.7	2030년 대비 배출량 55% 감축

주: 투자소요 추정치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누적규모를 의미하며, 10년간 필요한 투자규모를 모두 합한 뒤 평균 연간 GDP 대비 비율로 표현함.

자료: IMF, G20: Reaching Net Zero Emissions, 2021, p.14, Table 1; OECD, Investing in Climate, Investing in Growth, 2017; McCollum et al., "Energy Investment Needs for Fulfilling the Paris Agreement and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ature Energy, 2018, 3(7): 589-599; IEA, Sustainable Recovery, 2020; EIB, Building a Smart and Green Europe in the COVID-19 Era, 2021.

■ 그 가운데 코로나19 충격 대응을 위한 각국의 중장기 경기부양 정책에서 탄소중립 목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 2019년 12월 EU 집행위(European Committee; EC)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투입 계획으로서 약 1,000억 유로를 동원하는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발표
 - 2020년 4월 EC 유럽그린딜의 책임자(Frans Timmermans)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유로는 녹색전환과 디지털전환에 사용될 것이라 언급
- OECD(2020a)³⁾에서는 포스트코로나 경제복구사업들이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OECD(2020a)와 CAT(2020)⁴⁾은 중장기적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가격 시그널의 강화 및 화석 연료 분야 보조금의 재정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함

3)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 "COVID-19 and the Low-Carbon Transition: Impacts and Possible Policy Responses," 2020, <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covid-19-and-the-low-carbon-transition-impacts-and-possible-policy-responses-749738fc/>, 검색일자: 2021. 7. 31.

4) Climate Action Tracker (CAT), "A Government Roadmap for Addressing the Climate and Post COVID-19 Economic Crises," 2020, https://climateactiontracker.org/documents/706/CAT_2020-04-27_Briefing_COVID19_Apr2020.pdf, 검색일자: 2021.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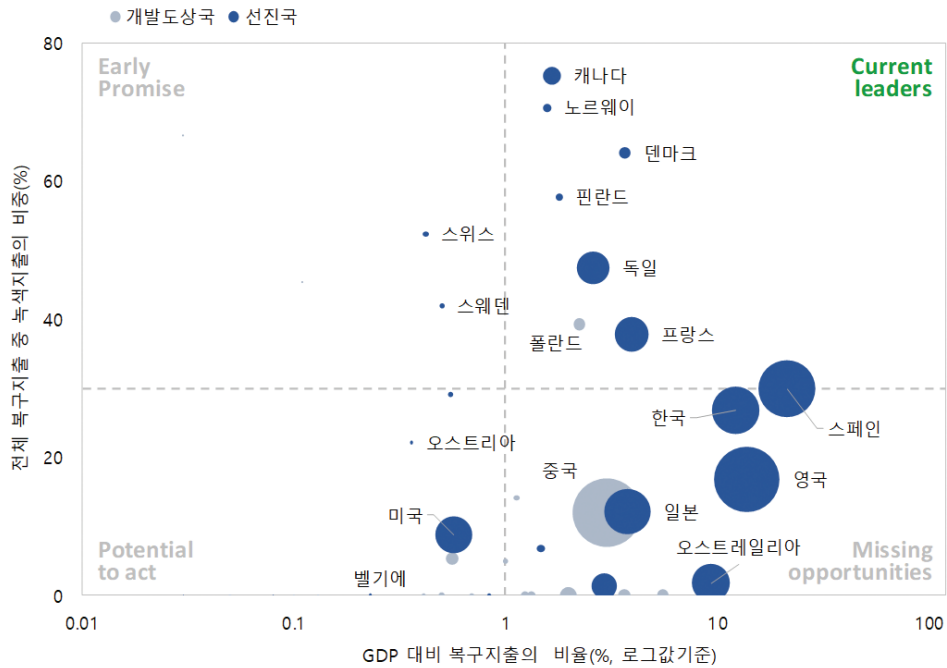
- 2021년 3월 발표된 UNEP(2021)⁵⁾에서는 Hepburn et al.(2020)⁶⁾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잘 설계된 녹색재정지출(green fiscal spending)은 전통적인 재정지출에 비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동시에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탄소중립 추진 목표가 결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재원조달 계획과 녹색예산 운용 방안의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유럽그린딜의 경우 InvestEU를 통한 공공 및 민간투자의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투자은행그룹 및 각국의 은행들이 참여를 전제로 약 2,79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유발을 전망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CCC) 산하 금융자문단(Advisory Group on Finance; AGF)의 최근 보고서⁷⁾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상의 15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투자가 정부 측만의 아젠다가 아닌 민간 영역의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향을 강조
- UNEP(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충격을 복구하기 위해 2020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15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녹색지출의 비중은 2020년 기준 평균 18% 수준에 그쳐 있는 상황임
 - UNEP(2021, p. 12 Table 5)에서는 ‘GDP 대비 복구비용 비중’이 1% 이상이고 ‘복구비용 내 녹색비용’ 규모가 30% 이상인 국가들을 선도국가로 규정
 - 이때 ‘GDP 규모 대비 복구비용의 비중’이 1%가 넘지만 ‘복구비용 내 녹색비용’의 규모가 30%를 하회하는 국가들은 (녹색지출을 통해 위기 복구와 함께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국가들로 구분했는데, 한국은 여기에 속함

5)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Are We Building Back Better? Evidence from 2020 and Pathways to Inclusive Green Recovery Spending, 2021,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35281/AWBBS.pdf>, 검색일자: 2021. 7. 31.

6) Hepburn et al. (2020), “Will COVID-19 Fiscal Recovery Packages Accelerate or Retard Progress on Climate Chang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36, No. S1, pp.S359-S381.

7) Advisory Group on Finance (AGF), The Road to Net-Zero Finance: A Report Prepared by the Advisory Group on Finance for the UK’s Climate Change Committee, 2021, <https://www.theccc.org.uk/wp-content/uploads/2020/12/Finance-Advisory-Group-Report-The-Road-to-Net-Zero-Finance.pdf>, 검색일자: 2021. 7. 31.

[그림 1] 2020-21년 기준 국가별 녹색지출 현황



주: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지출정보를 활용하여 'GDP 대비 복구지출의 비율이 1% 이상인지의 여부'와 '전체 복구지출 중 녹색지출의 비중이 30% 이상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4개 유형을 구분함. 각국의 거품크기는 전체 복구지출 규모를 의미하며, 한국은 2,010억 달러임.

자료: Global Recovery Observatory, Green Recovery Spending by Country, <https://recovery.smithschool.ox.ac.uk/tracking/>, 검색일자: 2021. 7. 31.

II. 탄소중립 추진 관련 주요국 재정 동향

1. 재정지출 및 자원조달 계획

- 2019년 말 EU 집행위가 유럽그린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밝힌 가운데, 공공재원으로는 EU 예산, 공정전환기금, 탄소배출권 기반기금 등을 활용할 예정(EC, 2020)⁸⁾
- 2020년 1월, 유럽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에 따르면 유럽그린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2021-30년) 1조 유로 규모를 조달 하는 계획을 세움
- (EU 예산: 5,030억 유로) 전체 1조 유로 규모 중 절반가량은 EU의 예산에서 직접 조달되며, EC는 향후 다년간지출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⁹⁾을 위한 자원 중 25%를 기후변화대응 관련 지출에 사용하기로 함
- (EIB 그룹 및 금융기구: 2,790억 유로) 2021-27년 MFF 안에는 InvestEU 프로그램의 신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들에 EU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 유발 효과를 기대
 - EU 집행위는 InvestEU하에서 추진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기후변화대응 관련 지속가능성을 일정 수준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 (공정전환메커니즘: 1,430억 유로) 유럽그린딜의 추진에 따른 피해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세 가지 축(pillar)에 기반한 자금운용을 시도
 - (Pillar 1) 회원국 출자(MFF 및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NGEU])로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을 조성하여, 취약지역의 경제다각화와 경제복원을 지원
 - (Pillar 2) InvestEU하 공정전환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공정전환 대상지역 및 비대상지역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순환경제 달성을 도모
 - (Pillar 3) EU 예산과 함께 EIB 그룹 및 타금융기관들의 대출을 결합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너지·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난방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효율개선 등)을 유도하고, 전환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적은 지역에 우선 적용
- (회원국: 1,140억 유로) EU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ESIF)¹⁰⁾의 특성상 EU 예산 집행 시 기금으로부터 매칭재원을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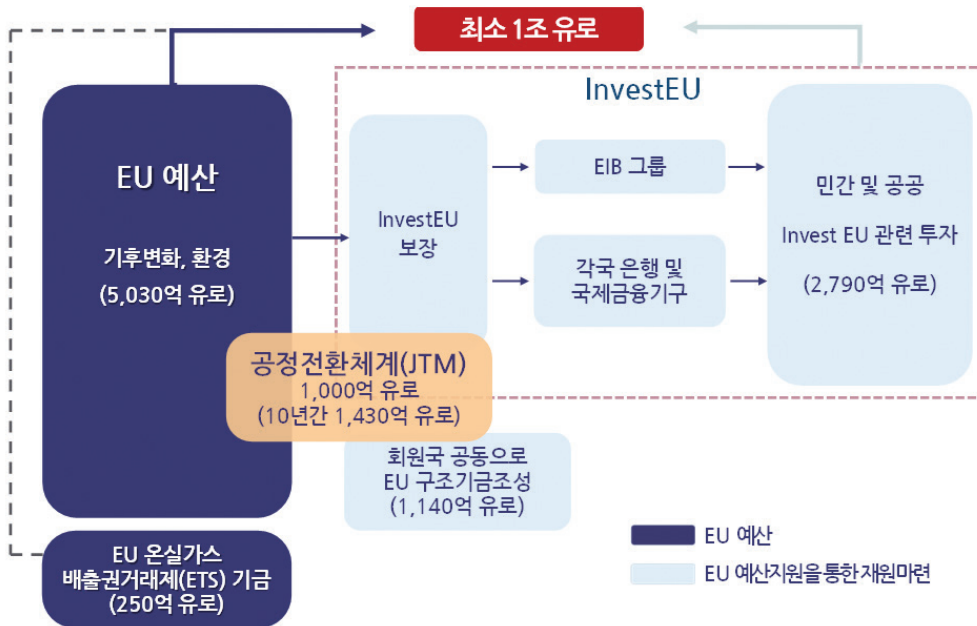
8) European Commission (EC), "The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and Just Transition Mechanism explained," 2020. 1. 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4, 검색일자: 2021. 7. 31.

9) EU는 7년 단위로 다년간지출예산(MFF) 계획을 마련하여 EU 회원국의 전원 합의 및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주요 재원으로는 1) 관세수입, 농산품에 대한 특별관세 등의 전통적 자원과 2)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플라스틱세 등의 회원국 분담금 및 신규 재원으로 구성됨

10)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결속기금(Cohesion Fund, CF), 농촌지역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e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해양어업기금(European Maritime & Fisheries Fund; EMFF) 등이 있음

- (배출권거래제수입: 250억 유로) 탄소배출권 거래에 따른 수입은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현대화기금(Modernisation Fund)를 조성하게 되고, EU 예산과 함께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가능

[그림 2] 유럽그린딜의 투자 및 자원조달 계획(2021-30년)



주: 2021-27년간의 투자계획을 토대로 2030년까지 외삽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Global Recovery Observatory, Green Recovery Spending by Country, <https://recovery.smithschool.ox.ac.uk/tracking/>, 검색일자: 2021.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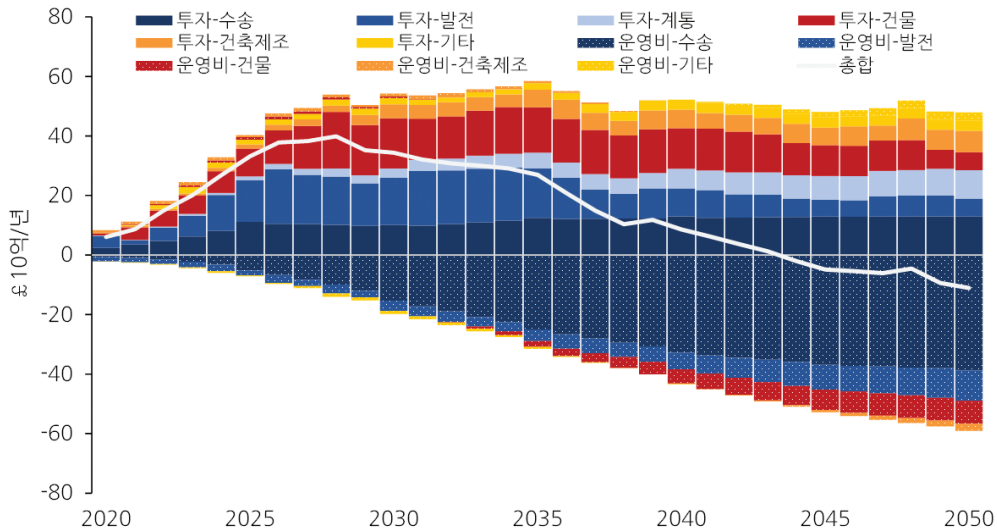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유럽그린딜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5%를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표하였고(향후 입법절차 통과 시 효력 발휘), 구체적으로 탄소비용부담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기금을 마련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음¹¹⁾
- 입법안의 내용은 1) 가격설정(pricing), 2) 목표설정(targets), 3) 규정정비(rules), 4) 지원 대책(support measur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는 가격설정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리함
-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인 전력, 철강, 화학 등에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를 추가하고 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 항공부문에 주어지던 무상할당을 202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포함

11) European Committee (EC), COM(2021) 550 final,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2021. 7. 14.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chapeau_communication.pdf, 검색일자: 2021. 7. 31; 장영욱·오테현,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Vol. 4, No. 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해운 부문 ETS는 2023-25년 사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6년부터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부문도 포함하여 적용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 시키는 방식
 - 2023년 잠정 발효를 통해 EU 역내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게 할 계획이며,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
 - 탄소국경적용제도 적용대상은 시멘트, 철강 및 철,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이며,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간접배출량)은 일단 제외됨
- (에너지조세지침 개정) 역내 단일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제품에 대한 조세제도 개정안을 제출
 - 청정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화석연료 사용에 혜택을 주는 세금유예를 폐지해나가기로 함
 - 개정안은 실제 에너지 함량에 따라 에너지 제품 세율이 결정되도록 함
- (공정전환 지원)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SCF)을 신설하고 기존의 혁신기금 및 현대화기금을 정비하여 공정전환에 지원할 재원을 추가 마련
 - 탄소비용부담 강화 및 각종 규정 강화와 맞물려 재원확보 여력을 키움
- 영국은 2020년 말 기후변화위원회가 6차 탄소예산(Carbon Budget)¹²⁾을 발표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소요비용과 관련 투자계획이 제시됨
 - 탄소중립을 위해 2020-50년 연평균 120억 파운드 수준의 자원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대 초반까지 GDP의 0.6% 수준에 도달한 뒤, 2030년대 및 2040년대 걸쳐 조금씩 하락하다가 2050년 무렵에는 0.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됨
 - 여기에는 공정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소요는 고려되지 않았는데, AGF(2021)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정전환위원회(Just Transition Committee)의 설립 필요성을 제언하면서 공전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익을 언급
 - 나아가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운영비 측면의 절감분을 함께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비용은 204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모두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수송 부문 내 효율적 연료 사용 및 유지비용 감소, 발전 부문 내 재생에너지의 낮은 한계비용, 건축 부문 내 효율적인 난방시스템의 활용 등이 고려됨

12) Climate Change Committee (CCC), The Sixth Carbon Budget: The UK's Path to Net Zero, 2020, <https://www.theccc.org.uk/wp-content/uploads/2020/12/The-Sixth-Carbon-Budget-The-UKs-path-to-Net-Zero.pdf>, 검색일자: 2021. 7. 31.

[그림 3] 영국의 탄소중립 추진 관련 부문별 비용 추정치



주: 화폐가치는 2019년 기준이며, 운영비의 경우 기준시나리오 대비 부문별로 연간 절약되는 규모를 의미함.

자료: Climate Change Committee, Sixth Carbon Budget, Dataset, <https://www.theccc.org.uk/publication/sixth-carbon-budget/>, 검색일자: 2021. 7. 31.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 중 대부분을 민간에서 조달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화석연료 기반 세수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영국 정부는 탈탄소 재정사업과 관련해 매년 50억 파운드(GDP 대비 0.25%) 가량을 집행 중이며, 여기에는 재생에너지난방인센티브(Renewable Heat Incentive) 및 전기차보조금(10억 파운드/년)과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5억 파운드/년)이 포함됨
 - 또한 요구지원 명목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포함하여 저탄소에너지원에 대한 지원(100억 파운드/년)과 에너지효율 지원(6억 파운드/년)이 이뤄짐
 - 한편, 주요财源으로는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변화부담금(Climate Change Levy) 수입(30억 파운드/년), 매립세 수입(7억 파운드/년), 유류세(280억 파운드/년), 내연기관자동차세(70억 파운드/년) 등이 있음
 - 향후 탄소중립 추진 시 친환경차 이용 증가로 인한 유류세 및 자동차세 감소분을 충당할 방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 상황
- 미국은 2021년 1월 파리협정 재가입 선언 이후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상향된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개도국 지원을 필두로 하여 기후금융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기후금융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¹³⁾을 공개

13) U.S White House, "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 2021. 4. 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4/U.S.-International-Climate-Finance-Plan-4.22.21-Updated-Spacing.pdf?source=email>, 검색일자: 2021. 7. 31.

-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기준 50~52%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과거 오바마 정부의 감축목표[2025년까지 26~28% 감축]보다 상향조정)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촉구
-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경제적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제조, 메탄배출저감, 건축물 개보수 등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
- 국제기후금융계획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과 공정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대비·적응·회복)과 관련된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2025년까지 미국이 수행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
 - (재정지원 확대) 개도국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2024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2기(2013~16년) 평균 재원규모 대비 공공 기후재원을 두 배(기후 적응 관련 재원은 3배)로 늘리고, 국제개발 관련 기관들의 지원을 강화
 - (민간투자 동원)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신규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기후 관련 사업들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운용에 있어서 민간재원 유입을 유도
 - (탄소집약적 사업 지원 중단) 탄소집약적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에너지 사업들 대부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예정
 - (자금투입과 기후목표의 연동) 금융시장에서 주요 기후목표(탄소배출저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관련 역량 강화)의 달성과 연관된 투자들을 장려
 - (기후금융 관리 체계 구축) 기후금융에 대한 정의, 규모, 보고체계 등을 정비하여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

2. 녹색예산제도의 운영

- OECD에서는 녹색예산제도(green budgeting)를 ‘기후 및 환경 관련 녹색목표 달성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출과정에 연관된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¹⁴⁾ 세부 정책수단들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OECD, 2020b)¹⁵⁾
- 2017년 12월 OECD가 주재한 파리협정 2주년 기념 정상회의(One Planet Summit)에서 ‘녹색예산제도에 대한 파리 협력’이 이뤄짐에 따라 녹색예산제도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침서의 마련이 촉구됨
- 녹색예산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크게 4 가지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며(〈표 2〉 참조), 각종 정책수단의 혼합적 활용을 통해 예산수립·지출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표 2〉 OECD의 녹색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

핵심요소	내용	국가사례
전략적 계획수립	· 국제협약 등을 통해 국가 정책목표 수립 시 환경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계획 수립	· 네덜란드의 경우 파리협약 이후 정부부처 전체에 걸쳐 통합적인 기후정책 수립을 추진 · 영국 예산책임처(OBR)의 재정위험보고서는 기후 관련 위험도 함께 검토
정책수단의 활용	· 예산의 편성·지출과 관련해 각종 수단을 토대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류 및 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비용편익분석, 녹색예산대기, 환경세 개혁 등을 고려	· 스코틀랜드는 지출 계획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도록 운영 · 프랑스는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하나의 사업에 대해 6가지의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긍정, 중립, 부정)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환경영향분류를 수행함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 정부의 예산 편성·지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기관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영국 감사원(NAO)은 재무부의 지출검토(spending review) 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수행 · 네덜란드의 경우 독립적인 PBL환경평가청이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체계적 재정 거버넌스 구축	· 전략적 계획수립과 예산의 편성·지출 과정이 연계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자료: OECD(2020b): OECD, “The OECD 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 Towards Green Budgeting Framework, 2020, <https://www.slideshare.net/OECD-GOV/session-1-scherie-nicol-and-juliane-jansen-oecd>, 검색일자: 2021. 7. 31

- 여러 국가들에서 녹색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나 많은 경우에 아직 초기 단계임¹⁶⁾
- 35개 OECD 국가들 가운데 2020년 기준 녹색예산제도 운영 국가들은 14개(40%)인 것으로 파악되며, 한국은 포함되지 않음(〈그림 4〉 참조)
 - 이탈리아는 2000년부터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프랑스는 비교적 최근인 2020년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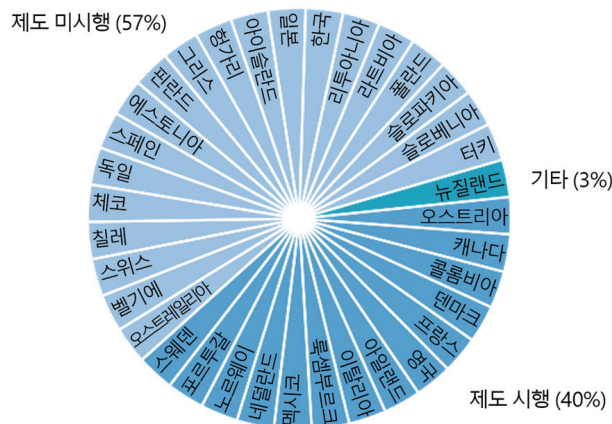
14)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Webpage, 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 <https://www.oecd.org/environment/green-budgeting/>, 검색일자: 2021. 7. 31.

15)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 - OECD Green Budgeting Framework Highlights,” 2020b, <https://www.oecd.org/environment/green-budgeting/OECD-Green-Budgeting-Framework-Highlights.pdf>, 검색일자: 2021. 7. 31.

16) European Committee (EC), Green Budgeting Practices in the EU: A First Review, 2021,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economy-finance/dp140_en.pdf, 검색일자: 2021. 7. 31.

- 녹색예산제도를 시행 중인 14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환경영향평가였으며(12개 국가, 86%), 이어서 환경측면 비용편익분석 및 탄소배출평가(10개 국가, 71%)와 탄소가격설정(9개 국가, 64%) 순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14개 국가 중 7개 국가(50%)는 예산법령이나 정치적 공약을 통해 녹색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며, 6개 국가(43%)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도입이 이뤄짐
- 34개 OECD 국가들 중 21개 국가(62%)가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복구 관련 재정지출 시 녹색예산제도의 정책수단들을 융합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활용된 수단은 환경영향평가(8개 국가, 38%)였으며, 이어서 녹색예산태깅(6개 국가, 29%)과 재정지출에 대한 녹색조건 연계(green conditionality)(5개 국가, 24%)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5월 발표된 EC(2021)¹⁷⁾에서는 EU의 녹색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로서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 계속해서 이뤄져야 하는 측면을 강조
 - 녹색예산의 항목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
 - 녹색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투입물 성격을 지닌 예산항목의 분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제도운영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좀 더 구조화된 영향분석도 함께 이뤄져야 함
 - 녹색예산제도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예산책정과정과 무관한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그림 4] 녹색예산제도의 도입 현황(2020년 기준)



주: 녹색예산제도 시행국가 분류는 각 정책수단들(예산수립을 위한 사전·사후적 환경영향평가, 사전·사후적 녹색예산태깅 등)이 국가 예산체계 전반에 활용되는지 여부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핀란드의 경우 녹색예산태깅만을 주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일부 예산항목에만 적용함에 따라 제도미시행 국가로 분류됨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21, p.127, Figure 5.1을 재인용; OECD and EC, Joint Survey on Emerging Green Budgeting Practices, 2020.

17) European Committee (EC), "Green Budgeting Practices in the EU: A First Review", 2021.5,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economy-finance/dp140_en.pdf, 검색일자: 2021. 7. 31.

〈표 3〉 녹색예산제도 시행 국가들의 정책수단 활용 현황(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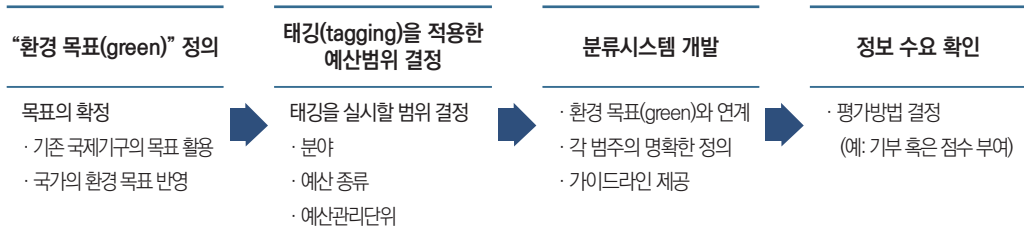
국가	예산용 사전·사후적 환경영향평가 (개별 측정)	환경측면 비용편 익분석 (개별 혹은 전체 측정)	탄소배출평가	탄소가격설정 (연료세,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포함)	환경친화적 조세정책 개혁 시행 여부	사전·사후적 녹색예산태깅
오스트리아	○		○			
캐나다	○	○		○		
콜롬비아	○	○	○	○	○	○
덴마크	○	○	○		○	
프랑스	○	○	○	○		○
아일랜드	○	○	○	○	○	○
이탈리아	○	○	○			○
룩셈부르크						○
멕시코						○
네덜란드	○	○	○	○	○	
노르웨이	○	○	○	○	○	○
포르투갈	○			○	○	
스웨덴	○	○	○	○	○	
영국	○	○	○	○	○	
총합	12	10	10	9	8	7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21, 2021, p.127, Table 5.5를 재인용; OECD and EC, Joint Survey on Emerging Green Budgeting Practices, 2020.

- 녹색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녹색예산태깅(Green Budget Tagging)은 기후변화 또는 환경오염의 관점에서 예산항목을 태그(tag)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녹색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큰 역할을 담당함(OECD 2021)¹⁸⁾
 - 정부가 기후·환경 측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예산항목을 조정하고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정비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대외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녹색예산태깅을 통해 기후·환경 관련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 항목들을 정렬하는 작업은 여러 수단 가운데 중요도가 높음
 - 녹색예산태깅의 도입을 위해서는 크게 4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그림 5] 참조), 구체적인 운영방식인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표 4〉 참조)
 -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국가의 경우, 기후 관련 예산항목을 하나로 범주화하거나(예: 아일랜드) 기후완화와 기후적응을 세분화함(예: 방글라데시)

18)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reen Budget Tagging: Introductory Guidance & Principles, OECD Publishing, Paris, 2021, <https://doi.org/10.1787/fe7bfcc4-en>, 검색일자: 2021. 7. 31.

[그림 5] 녹색예산태깅 절차



자료: OECD, Green Budget Tagging: Introductory Guidance & Principles, 2021, p. 16, Figure 1.

〈표 4〉 주요국 녹색예산태깅 체계 현황

접근방식	국가	녹색예산태깅의 목적	태깅 분류(태그지정)
기후 관련 분야의 예산항목 식별	방글라데시	국가가 기후예산을 추적, 보고하기 위한 기제	재정지출이 6개 영역(식량안보·사회보호·보건, 포괄적인 재난관리, 인프라, 연구 및 지식관리, 기후완화 및 저탄소 개발, 역량강화 및 제도 강화)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국가 기후변화 44개 프로그램 중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콜롬비아	UN 기후변화협약의 일환으로 국가의 환경목표 달성	기후완화 및 적응과 직접 연관이 되는 12개 부문의 중앙, 지역, 지방정부의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녹색채권과 관련된 보고 요건 지원	기후변화 해결에 사용된 지출 항목(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정의한 “녹색 지출” 기준)
기후 및 여타 환경 관련 분야의 예산항목 식별	프랑스	환경 및 기후 변화 관련 정책의 투명성 강화, 공공정책결정 개선	지속가능성을 근간으로 하는 EU의 6개 분류(기후변화 적응, 완화,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수질관리 및 대기질)에 해당하는 항목
	이탈리아	의회요청에 따른 환경지출 관련 투명성 강화	환경보호 및 환경파괴 감소를 위한 SERIEE(European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Economic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의 분류기준에 따른 지출항목
	필리핀	국가기후변화실행계획(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에 수립된 우선순위 영역을 대상으로 지출비용 추적	7개 영역(식량안전, 물 부족, 생태계 및 환경·생태적 안정성, 안전, 기후관련 스마트 산업 및 서비스, 지속 가능 에너지, 지식 및 역량 강화)에 해당하는 지출비용

자료: OECD, Green Budget Tagging: Introductory Guidance & Principles, 2021, p.20, Table 1.

III. 시사점

-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들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기금신설 및 탄소가격 강화 등을 통해 재원 마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EU의 경우, 기후 및 환경을 고려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금융권과 연계하여 EU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공정전환을 위한 재원을 위해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경로로 탄소가격을 강화하고 목표 및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유럽그린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 기금신설과 함께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원확보 여력을 키움
 - 영국의 경우,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한 화석연료 기반 세수 감소를 대비하여 기존 에너지 세제의 추가적 보완을 고려하고 있음
 - 미국은 파리협정 재가입에 이어 향후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원활한 자금 투입을 도모하고자 함
-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된 재정지출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예산제도의 활용을 통해 재정투입을 녹색화함으로써 경제적 기회를 마련과 함께 탄소중립을 좀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OECD 국가들 중 절반 이상이 녹색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기후분야에 국한한 적용과 기후 및 환경 분야를 포괄한 적용이 모두 존재함
 - 아직 국가별로 상이한 적용방식하에 엄밀한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한계가 존재
 - 녹색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각종 정책수단 가운데 녹색예산태깅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운용방식으로서의 장점을 지님
 - 여러 OECD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정투입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요인 및 기후·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차원으로 녹색예산제도의 정책수단들을 활용하고 있음
 - 예산수립 및 지출과정에 연동된 환경영향평가, 녹색예산태깅, 녹색조건부여 등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R&D 투자전략 및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장 손병호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기후변화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기술패권 유지와 글로벌 리더십 확보 전략

2021년도 연방정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1,655억 달러(약 180조원) 규모이다. 바이든 정부는 경기 부양과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에너지, 바이오, 첨단제조 등 미래 혁신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Make in all of American)를 강조하며, AI·5G·첨단소재·전기차·바이오 등 신산업 R&D에 향후 4년간 3천억 달러를 신규로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 유지와 경쟁력 확보, 제조 및 공급망 강화 등을 목표로 ‘끝없는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6월 8일에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동 법을 기반으로 AI, 양자컴퓨팅, 고성능컴퓨팅 및 반도체, 첨단에너지, 로봇공학 및 첨단제조, 바이오, 재해방지, 사이버보안 등 10대 첨단기술 분야 R&D에 향후 5년간(2022~2026) 1,50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10조원이 넘는 긴급 R&D 자금을 투입하였고, 그 중 백신 개발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였다. 2021년도 NIAID(국립알러지감염병연구소)와 CDC(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련 예산은 83.8억(약 9,700억원) 달러로 편성되었다.

일본, 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 창출 전략

2021년도 일본 과학기술관계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5조 9,118억 엔(약 62조원)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 창출을 목표로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을 통해 일본이 지향하는 ‘Society 5.0’ 실현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교육 및 인재육성, 지식프론티어 개척 및 원천연구 강화 등 3대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5년간 정부 R&D 투자를 지난 5년간 26.1조 엔에서 30조 엔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일본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를 중심으로 미래산업 창조와 사회변혁을 위해 도전하는 R&D 사업인 ‘Moonshot’ 프로그램 등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긴급경제대책으로 2회의 추경(총 57.6조엔)을 투입하여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기술 개발, 연구 시설·장비 원격화와 자동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 ‘친환경·건강·디지털·포용성의 유럽’ 강화 전략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Horizon Europe(2021~2027)’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건강·디지털·포용성의 유럽’ 구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7년간 총 969억 유로(약 131.6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전 프로그램인 ‘Horizon 2020(2014~2020)’의 780억 유로 투자에 비해 약 24% 정도 증가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와 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에 기반한 사회·경제문제 해결을 추진하여 1유로당 11유로 GDP 성장, 기후대응에 총 예산의 35% 이상 투입,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수과학, 글로벌 도전과제 및 산업경쟁력, 혁신적 유럽 등 3개 핵심영역(pillar)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유럽의 산업경쟁력 강화 영역에 제일 많은 예산(536억 유로)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Horizon 2020을 통해 1.3조원을 투자하였으며, 대응 기술개발 뿐 아니라 보건시스템 복구 등에도 지원하였다.

중국, 과학기술 자립(自立)·자강(自強) 전략

중국은 최근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2021~2025) 추진할 과학기술 R&D 혁신전략을 제시하였다.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국내수요 기반 쌍순환 경제체계 구축과 더불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강조하였다. 향후 5년 동안 R&D 투자를 매년 7% 이상씩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은 2020년 2.3~2.4%에서 2025년 2.8%로 높아질 전망이다. 14차 5개년 계획은 기술자립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획기적 기술 성과를 위한 7대 선도 기술(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및 반도체,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임상의학 및 건강, 우주·심해·북극 연구)을 제시하였다.

또한,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집중 육성이 시급한 8대 전략적 신흥산업(고급 신소재, 중·대기술장비, 스마트제조·로봇, 항공기 엔진,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응용, 신에너지 차량·스마트카, 첨단의료장비 및 신약, 농업기계)을 지정·지원하여 미국의 견제를 받는 ‘중국제조 2025’ 산업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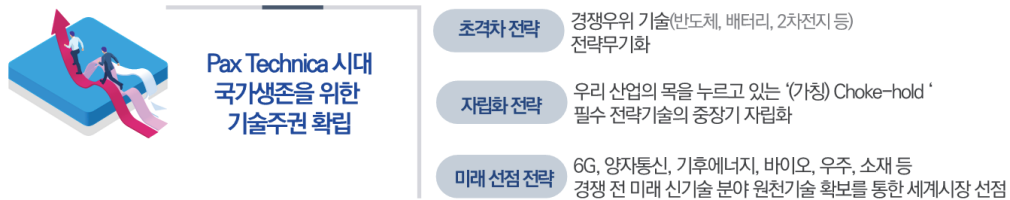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적 R&D투자 강화 필요

우리나라의 2021년 정부 R&D 예산은 27.4조 원인데,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는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R&D 예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R&D 투자가 필요하다. 감염병 분야의 기술 수준을 고려한 중·장기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와 기술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3대 핵심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D(Data).N(Network).A(AI) 분야 차세대 핵

심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R&D 지원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1〉 기술패권 시대 국가생존을 위한 ‘기술주권 확립’ R&D 전략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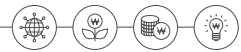
둘째,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의 국가생존을 위한 ‘기술주권 확립’ R&D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가 제조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분야는 현재의 초격차를 유지하여 전략무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산업의 목을 누르고 있는 ‘(가칭) Choke-hold 기술’의 자립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향후 5년 내외에 필수적으로 기술 자립화를 추진할 품목을 선정하여 국가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6G, 양자컴퓨팅, 뇌연구, 센서, 우주 등 경쟁 전 미래 신기술(Pre-competitive Technologies)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적 R&D 투자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포용(Inclusiveness)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중시하는 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향후 과학기술정책은 ‘위기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의 진전(bounce forward)’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감염병, 미세먼지, 기후변화, 고령화 등 주요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적 국가R&D 혁신도 필요하다. 미래 탄소중립 사회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목표로 부문별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혁신기술에 중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R&D 예산의 확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 R&D사업 성과의 활용·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업 기획단계부터 수요자인 민간기업의 수요를 반영하

고, 국가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단계에서의 기술적인 갭(Gap)을 메워줄 수 있는 추가 자금과 제도적 지원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R&D 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전형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위정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상황이 1년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7조원 수준의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9.3조원 규모의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금년의 경우에도 49.8조원 규모의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18.3조원 규모의 4차례 현금지원 이외에도 약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고용유지 관련 인건비 지원 등 약 50조원 수준의 특별지원도 병행해 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고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발생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객관성·형평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화를 금년 초부터 추진하여 왔다. 관계 부처 간 수차례의 TF 회의,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청문회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조율을 거친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 지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7월 7일에 공포하였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21년 10월 8일)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 규정하였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 법령에는 피해지원에 대한 기본원칙 및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피해산정·

지원금액·집행체계 등 구체적인 운영지침은 10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하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토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향을 ① 지원대상, ② 지원내용, ③ 지급 절차 및 지급시기, ④ 재원의 네 가지 주요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함께 중장기적 피해지원 시스템 마련방안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소상공인(「개정법률」 제12조의2 제1항)이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일부 소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둘째, 손실보상금의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다.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개정법률」 제12조의4 제5항)하여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셋째, 손실보상 지급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를 통해 손실보상을 신청할 경우 국세신고 자료 등 기존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곧바로 첫 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중 관련 세부지침을 고시하여 금년 10월말부터 첫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전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고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다. 또한, 손실보상 이의신청 제도 마련을 통해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를 확인·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증감 결정 등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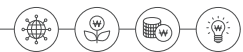
넷째, 정부는 손실보상 재원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 등을 감안하여 금년 2차 추경을 통해 1조원을 우선 확보하였고, 이의신청에 대비한 손해사정 예산 104억 원도 반영하였다. 실제 손실보상 소요는 피해규모·향후 결정될 구체적 보상 기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22년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손실보상 제도화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중 정부의 코로나19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의무’를 법제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미권 및 유럽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적 지원 규정이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강구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국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도화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인 피해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을 활용한 직접적인 피해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다층적 피해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고,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OECD와 공동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금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가 최근 방역 상황의 악화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다시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손실보상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한다.

「국민공감예산」 편성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 권기중

문재인 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일반 국민들도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에 관한 제안을 하고,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2018년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참여예산은 크게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골자로 하는 우리 헌법 통치구조 하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무방할 것이다.

시행 4년차를 맞은 우리 참여예산제도는 여타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서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도입 초기 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주기에 맞추기 위해 상반기 동안에만 국민들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각 부처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사업으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통계적 추출 방식을 통해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예산국민참여단 400여명을 선발하여 6~7월 중 1박2일 집중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논의와 선호도 투표 활동을 시키는 비교적 단순한 구도로 시작했다. 이러한 틀 내에서는 폭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코로나19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대면 모임에 큰 제한이 발생하게 되어 참여예산제도는 크게 변화하게 된다. 먼저, 상반기 위주로 운영되었던 참여예산제도는 상시화 되어 국민들에게 언제나 열려있고 참여 가능한 제도로 바뀌었다. 1~3월에 집중되었던 예산사업 제안접수기간을 상시화한 것이 그 핵심이다. 또한, 예산국민참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20년부터 참여단 활동의 주 공

간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동인원을 기존 40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들은 개편된 상시운영체제와 발맞추어 기본적으로 1년 동안 각 부처 사업숙성 과정, 온·오프라인 토론, 집행현장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제안형 참여예산만으로는 참여예산 확대에 한계가 있어 토론형 참여예산을 만들었다. 현재 토론형 참여예산은 각 부처가 주도가 되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예산사업을 국민들과 함께 설계해나갈 수 있는 형태로 발전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국민참여예산은 '19회계연도 928억원에서 '21회계연도 1,168억원으로 규모가 늘어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운영 성과와 더불어 금년에는 '참여예산사업 제안 및 발굴' 중심의 기존 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벗어나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 참여를 시도했다. 바로 그간 대국민 소통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온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재정정책 각 분야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한 것이 그것이다. 첫 단계는 '22년 예산편성방향, 재정건전성·재정준칙, 재정분권 등에 관한 설문조사로, 약 3주의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서베이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22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의 적정수준이나 국가 채무 규모·재정건정성 수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물었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복지·벤처·창업 등 세부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연령과 지역 등을 감안한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구성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발표하지는 못했으나 재정정책 수립에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충분하다.

다음으로 '22년도 예산편성 6가지 중점과제에 대한 온라인 댓글토론을 실시했다. 재정당국이 선정한 6대 중점과제는 청년일자리 지원강화, 코로나19 학습격차 해소, 한류연계 K-브랜드 확산, 저출산·고령화 대응, 소상공인 재창업 및 취업지원 강화, 지역소멸 대응으로, 각 토론방에서 적극적인 댓글이 이어졌다. 온라인 댓글 토론 중에서는 특히 청년일자리 지원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청년일자리 지원강화 과제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유지·관리 지원방안도 중요하다는 의견, 혁신적인 교육훈련을 요청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과제의 경우 손주 돌봄을 하는 조부모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의견, 대학교육까지 의무교육화해 달라는 의견, 난임의 경우 임신이 될 때까지 비용 지원이 필요하

다는 의견 등 실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두 번째 온라인 댓글토론 주제로 중기투자 방향과 지출효율화 과제 총 5가지를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 중에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재양성, 비대면사회 필수 안전망 보장 등 향후 5년 간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보험기금사업 등 기존 예산사업에 대한 지출효율화 방향이나 에너지 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정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재정관리, 국유재산 관리 등 다양한 재정현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청취해 볼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일반국민 의견수렴과 함께, '22년도 예산편성이 본격화되는 6월말~8월초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예산 수요자 의견을 직접 청취·수렴하기 위해 기재부 2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분야별·권역별 예산협의회'를 연속 개최하였다. 국방, 일자리·고용, 사회복지, 문화·체육·관광, 농림·해양·산림, 환경, SOC, 보건·의료, 소상공인·중소기업, R&D·혁신산업, 고등교육 등 총 11개 분야별 예산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투자방향에 부합하는 각 정책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사업 발굴, 효율적 지출구조조정 방안, 전달체계 개선 등 효과적 재정지원에 관한 예산수요자, 정부부처, 전문가, 사업수행·집행기관 등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분야별 예산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요 사항은 지면 관계 상 아래 표로 대신한다.

분야	중점 논의과제
국방	①군 장병 ICT 정예화 ②민·군 기술협력 강화 ③장병급식 등 복지 증진
일자리·고용	①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 ②직업훈련 체계 개편 ③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④맞춤형 고용노동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①취약계층 기본 생활 보장 ②빈곤층 추락 방지 지원 ③저출산 완화·고령사회 대응 ④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	①문화·관광·스포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②K-한류 글로벌화 선도 ③문화복지 확대
농림·해양·산림	①농어촌 탄소중립 허브화 ②농어업 디지털전환 ③농어촌 재생뉴딜 등 생활인프라 개선 ④농어촌 경영의 안전·포용성 강화
R&D·혁신산업	①혁신적 기술개발 ②한국판뉴딜 2.0 성과 본격창출 ③미래 프론티어 기술 선제투자 ④과학기술 발전 생태계 활성화
환경	①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②물/대기/폐기물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③기후·환경 위기대응 등 안전망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①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②중소기업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강화 ③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강한 소상공인 육성 ④지역특화 중소기업 혁신

분야	중점 논의과제
SOC	①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육성 ②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원 ③국민안전·생활체감형 SOC서비스 확충 ④디지털·저탄소 SOC전환
고등교육	①새로 신설된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 및 성과 창출 ②고등교육기회의 지속 확대 ③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뒷받침
보건·의료	①백신 글로벌 허브화 ②방역 등 공공인프라 고도화 ③ICT 기반 스마트 의료·건강관리시스템 구축 ④보건의료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또한, 분야별 예산협의회의와는 별도로 전국을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세종, 수도권·강원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의 의견을 듣는 권역별 예산협의회도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단계 재정분권, 지역균형 뉴딜, 생활 SOC, 광역철도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지방의 공통 재정현안과 각 시도별 현안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참여예산 플랫폼을 이용한 의견수렴 결과와 분야별·권역별 예산협의회에서 수렴한 제안·의견은 심도깊게 검토한 후 내년도 재정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명실상부한 「국민공감예산」으로 만들 것이다.

사실상 세계 최초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참여예산제도는 아직도 발전 단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들과 보다 폭넓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실제 수요자이자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재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지자체 자본보조사업 실집행 개선방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 이명선

지자체 자본보조는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체육관이나 박물관 건립 등 시설사업이 해당된다.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은 중앙부처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이 지자체에서 민간부문(건설사 등)으로 실집행될 때 비로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편익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실집행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집행실적을 보면 중앙부처가 지자체로 자금을 교부하는 시점의 ‘집행률’에 비해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자금을 지불하는 시점의 ‘실집행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년만 보더라도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집행률은 97.8%였던 반면 실집행률은 66.3%에 그쳤다.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이 지속될 경우, 재정사업의 경제활성화 기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지난해 지자체가 이·불용한 예산 46조원 중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이월액은 11조원으로, 이는 GDP의 0.6%에 해당한다. 재정사업이 지자체에서 제때 실집행 되지 못함에 따라 경기 부양 효과 역시 적기에 가시화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7년 e-나라도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실집행 집계 기반 구축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금년에는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 전반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 자본보조사업 실집행 부진 사유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일부 부처 사업에서는 연차별 공정률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예산이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시설사업은 “계획-설계-인허가-보상-공사” 각 단계에 따라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이 달라진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에서는 연도별로 일률적인 정액 보조금이 배정·교부됨에 따라, 사업 초기 구조적인 이·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지자체별 실집행 여력 등에 따라 교부액 규모를 연중 조정하는 체계가 부족했다. 시설사업의 경우 민원이나 보상, 설계변경 등 집행 여건에 따라 실집행이 원활한 현장과 부진한 현장으로 나뉘게 된다. 그런데, 교부된 보조금을 지자체·현장별로 조정하지 못할 경우, 실집행 부진 현장에서는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되고, 실집행이 원활한 현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해 추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자금의 수요-공급 간의 미스매치로 인해 구조적인 실집행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주무부처의 실집행 관리 유인이 부족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현재 재정사업 평가체계에서는 성과 평가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아닌 ‘집행률’만을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의 주무부처에서는 집행률만을 관리할 뿐, 실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할 유인이 부재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집행 관행도 아쉽다. 보조금 실집행 실적에 대한 명확한 유인 구조가 없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미리 충분히 받아 놓고, 이를 이월하여 다년도에 걸쳐 실집행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실집행률 부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실집행 부진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집행·성과관리 등 예산 전주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안도걸 차관은 지난 6월 재정운용전략회의 및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자체 자본보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네 가지 개선방향을 마련하였다.

첫째, 다년도 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연차별 실소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 배정하도록 한다. 실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예산 배분기간을 연장하고, 연차별 실소요를 고려하여 사업 초기 배분비율은 축소하고 중기 이후 배분비율은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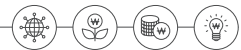
둘째, 실집행 실적에 따라 지자체간 연중 교부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연도 중에 지자체별 실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자체별 보조금 과부족을 보완할 계획이다. 즉, 자금의 수요-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지자체 전체적인 실집행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

셋째, 보조사업 평가시 집행실적 기준을 ‘집행률’에서 ‘실집행률’로 바꾸어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실집행 점검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경우 실집행 실적에 따른 감점을 도입(‘21년 신규도입, 최대 3.0점)하고, 재정사업자율평가도 집행실적 평가기준을 실집행률로 변경(‘21년 신규도입)함으로써 주무부처가 실집행을 관리할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균특회계 시도 포괄보조금 차등지원 인센티브 산정시 지자체별 실집행 제고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실집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만성적 예산 이·불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편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본보조사업 실집행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민간부분으로의 적극적인 보조금 실집행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위의 개선방향과 함께 예산편성·집행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등 지자체 자본보조사업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디브레인, 데이터 기반 행정과 AI 정부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난다.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단장 윤정식

I.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방향

디지털 시대에는 공공행정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되고 혁신되어야 한다. 그 방향은 데이터 등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맞춰 2020년 12월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구축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과 AI 정부’를 구현할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 착수된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사업은 총 1,561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삼성SDS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2007년부터 운영해 온 현 디브레인의 예산, 회계결산 등 재정관련 17개 단위업무의 처리 시스템을 시대변화에 맞춰 전면 재구축하고, 아울러 정부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3가지의 새로운 전략적 요소가 더 필요하였다.

첫째, 데이터(Data)다. 현 디브레인에는 재정데이터만 축적되고 있는데, 국가의 정책결정에는 사회경제지표, 행정지표, 그리고 필요할 경우 민간 데이터까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계(Networking)다. 다른 시스템이 생성 및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지표 및 행정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48개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807개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인공지능(AI)이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활

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차세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비전과 전략에 따라 새로 구현되는 기능이 개념적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를 위한 코라스(KORAHs)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코다스(KODAS)이다.

II.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

KORAHs(KOrea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는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데, 정책지표의 데이터 변동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후 위험 요인을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 정책지표의 경우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는 ‘정책상황판’을 구성하여 집중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지표를 진단·전망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먼저,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7,800여개의 정책지표를 실시간 연계하였다. 이 지표에는 디브레인 내의 재정지표와 함께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각종 사회경제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56개 부처청의 정책실무자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였다. 각 지표 중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그 변동상황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경고 신호를 발신할 수 있다.

〈표1〉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모니터링 지표구성 현황

12대 분야		주요 지표 및 통계표	지표수
디브레인 내부지표		예산, 집행, 결산, 자산 등	2,441
외부 지표	R&D	R&D	33
	SOC	도로, 물류·수자원, 지역 및 도시 등	223
	공공질서·안정	경찰, 법무 및 검찰, 재난재해사고 등	260
	교육	고등교육, 교육일반, 유아초중등 등	136
	국방	방위력 개선, 병무 등	33
	농림·수산·식품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업 등	158
	문화·체육·관광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문화예술 등	151
	보건·복지·고용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노동(고용), 보건의료, 사회복지일반, 인구 등	1,8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중소기업일반, 산업혁신지원, 창업 및 벤처 등	549
	외교·통일	외교·통상, 통일	59
	일반·지방행정	국민계정, 국세, 금융, 일반행정, 정부자원관리, 지역통계	1,282
	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물환경 등	450
	재정, 지방재정	보조금, 지방교육재정, 지방재정	307
	합계		7,890

지금은 각 부처가 정책상황을 점검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KORHAS 시스템이 개통되면 데이터에 기반하여 통합적으로 국가의 정책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7,800여개 이상의 지표 중 점검이 필요한 지표들이 자동적으로 보고되면, 정책담당자는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스마트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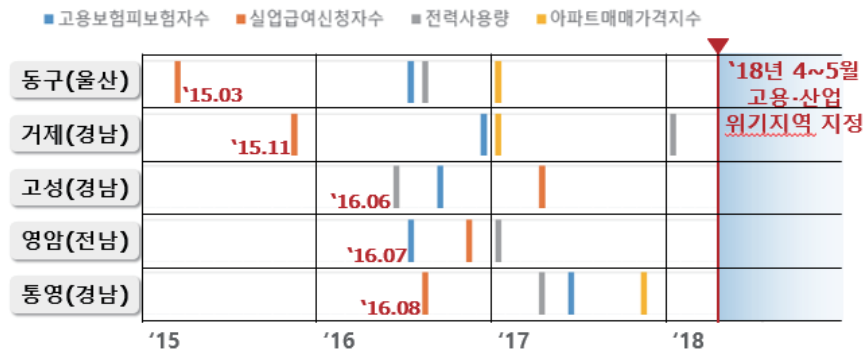
둘째, 주요 정책지표에 대해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판이 구축되면 실시간으로 정책상황의 진단과 관리가 가능하다. 차세대 디브레인에는 인구, 일자리, 지역민생, 대외변동성에 대해 시각화된 정책상황판이 구축된다. 지역민생 지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6개 분야의 30개 주요지표, 75개 세부지표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지역의 민생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황판을 구성하고 있다.

〈표2〉 지역민생 지표분야 및 30개 주요지표

분야	대표지표	분야	대표지표
지역기본 통계(4)	명목 GRDP	일자리(4)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실질 GRDP		국민연금 가입자수
	재정자립도		실업급여 신청자수
	산업별 종사자수		실업급여 지급자수
경기(10)	신용카드 사용액	주거(6)	주택가격지수(종합 매매)
	전력사용량(산업용)		주택가격지수(종합 전세)
	상가공실률(소규모)		주택가격지수(아파트 매매)
	상가공실률(중대형)		주택가격지수(아파트 전세)
	사업자 현황		주택착공실적
	어음부도율		주택준공실적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안전(5)	자살률
	건강보험료 체납		범죄건수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수		미세먼지(연평균 농도)
	1분위 근로소득		미세먼지(월평균 농도)
			미세먼지(수준별 일수)
재정지출(1)	긴급복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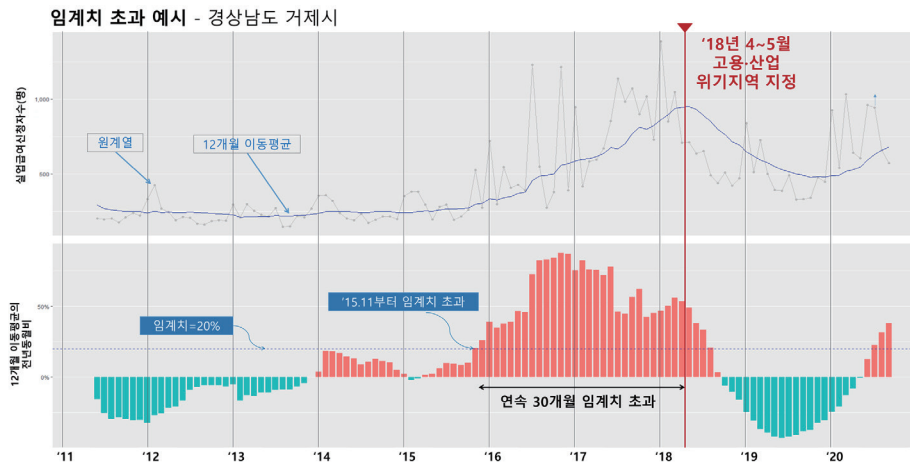
위의 지표를 활용하여 구성된 상황판을 통해 지역의 고용·산업 관련 주요 정책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상황을 사전에 진단이 가능한 지 분석해 보았다. 해당 위기지역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고용·산업 관련 7개 지표에 대해 살펴보면 위기수준을 초과하는 시점을 확인한 결과, 울산 동구, 경남 거제·고성·통영, 전남 영암이 5개 이상의 지표에서 임계수준의 초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울산 동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015년 3월부터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등 고용·산업 위기의 경고를 최대 3년 전부터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림1〉 민생지표의 지역별 임계치 초과 시점



아래의 경남 거제시의 경우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2018.4~5월에 지정되었으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2015년 하반기에 이미 위기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으며, 위기지역 지정 이후 2018년에는 정부의 정책대응으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정책상황판을 활용하면 지역민생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책지표도 차세대 디브레인을 플랫폼으로 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2〉 지역위기 조기 진단 예시



셋째,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에 더하여 차세대 디브레인에 연계되어 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지표의 현황을 진단하고 예측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주요 정책지표를 진단·전망할 수 있는 학습기반을 만들고, 지속적인 학습과 최적화 과정을 거친다면 머지않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진단하고 전망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

정부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한 것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공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공공행정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도 2018년 증거기반 행정 기초법(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ct of 2018)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KODAS(KOrea Data Analysis Service)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디브레인에 구축될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현 디브레인은 부처 간 칸막이가 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동안은 예산 및 회계결산 등 재정업무 처리를 중심으로 약 6만여 명의 공무원들만이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차세대 디브레인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면 최대 74만여 명,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KODA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KODAS가 대한민국 정부를 AI 정부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ODAS을 위해 먼저 807개의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 차세대 디브레인에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디브레인의 재정데이터를 기본으로 통계청, 한국은행 등의 사회경제지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행정지표를 연계하고, 필요하다면 민간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첨단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할 것이다. 이미 사용자인 공무원들의 데이터 분석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 양성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시범교육까지 완료하였다. 내년부터는 한국재정정보원이 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하며,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Ⅳ. 맺음말

2022년 1월 3일에 전면 개통하는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사업은 현재 9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통합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디브레인은 17개 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며, 아울러 정책상황 관리 및 데이터 분석 인프라로 제공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과 AI 정부의 플랫폼으로 활용되어 시대변화와 현장상황에 딱 맞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꼼꼼히 잘 살피고,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V

주요 재정통계

1. 국민소득계정
2. 총수입
3. 총지출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중앙정부)
6. 세계잉여금
7. 국유재산 현황
8. 기금·투자플 운용현황
9. 보증채무 현황
10. 국가채권 현황
11. 부담금 운용현황
12. 정부출자 현황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14. 공공기관 현황



1.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경상)		경제성장률(실질,%)			GDP 디플레이터(%)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 (전년 동기비)	GDP (전기비)	GNI (전년 동기비)	지수	상승률
2012	14,401,114	12,784	14,551,703	12,918	2,899	25,724	2.4	2.4	2.9	95.1	1.3
2013	15,008,191	13,708	15,103,849	13,795	2,995	27,351	3.2	3.2	3.8	96.0	1.0
2014	15,629,289	14,843	15,704,933	14,915	3,095	29,384	3.2	3.2	3.5	96.9	0.9
2015	16,580,204	14,658	16,632,066	14,704	3,260	28,814	2.8	2.8	6.3	100.0	3.2
2016	17,407,796	15,001	17,471,435	15,056	3,411	29,394	2.9	2.9	4.4	102.0	2.0
2017	18,356,982	16,233	18,431,809	16,299	3,589	31,734	3.2	3.2	3.3	104.3	2.2
2018	18,981,926	17,252	19,058,375	17,321	3,693	33,564	2.9	2.9	1.6	104.8	0.5
2019 ^p	19,190,399	16,463	19,357,151	16,606	3,744	32,115	2.0	2.2	0.1	103.8	△0.9
2020 ^p	19,244,529	16,308	19,403,481	16,443	3,747	31,775	△1.0	△0.9	△0.3	105.1	1.3
2014. II	3,885,669	-	3,899,249	-	-	-	3.4	0.7	3.6	96.3	0.7
III	3,934,254	-	3,958,069	-	-	-	3.1	0.4	2.7	97.9	0.5
IV	4,073,770	-	4,113,125	-	-	-	2.6	0.6	3.7	96.3	1.2
2015. I	3,942,618	-	3,988,772	-	-	-	2.5	0.9	7.5	100.2	3.0
II	4,113,868	-	4,090,233	-	-	-	2.0	0.4	5.1	99.9	3.8
III	4,207,908	-	4,228,807	-	-	-	3.3	1.5	7.2	101.3	3.5
IV	4,315,698	-	4,324,142	-	-	-	3.4	0.7	5.6	98.6	2.5
2016. I	4,134,826	-	4,153,731	-	-	-	2.8	0.3	4.9	102.2	2.0
II	4,344,629	-	4,345,827	-	-	-	3.6	1.1	5.8	101.9	2.0
III	4,394,216	-	4,423,302	-	-	-	2.8	0.4	3.7	102.9	1.6
IV	4,534,124	-	4,548,574	-	-	-	2.6	0.8	3.4	101.0	2.4
2017. I	4,330,273	-	4,352,098	-	-	-	3.1	0.8	2.6	104.0	1.7
II	4,541,417	-	4,509,787	-	-	-	2.7	0.7	2.1	103.6	1.6
III	4,734,362	-	4,782,699	-	-	-	3.9	1.5	5.3	106.7	3.7
IV	4,750,929	-	4,787,225	-	-	-	2.9	△0.1	3.2	102.8	1.8
2018. I	4,498,381	-	4,525,595	-	-	-	3.0	1.1	2.8	104.7	0.8
II	4,730,183	-	4,703,033	-	-	-	3.1	0.6	2.3	104.7	1.0
III	4,855,357	-	4,896,131	-	-	-	2.4	0.6	0.2	106.9	0.2
IV	4,898,005	-	4,933,617	-	-	-	3.1	0.9	1.2	102.8	0.0
2019 ^p . I	4,546,148	-	4,550,553	-	-	-	1.9	△0.2	△0.4	104.2	△0.5
II	4,520,982	-	4,558,123	-	-	-	2.3	1.0	0.3	104.1	△0.6
III	4,512,441	-	4,584,173	-	-	-	2.1	0.4	0.5	105.3	△1.5
IV	4,552,892	-	4,592,619	-	-	-	2.6	1.3	1.0	102.0	△0.7
2020 ^p . I	4,522,918	-	4,564,843	-	-	-	1.5	△1.3	0.2	103.6	△0.6
II	4,438,894	-	4,473,158	-	-	-	△2.6	△3.2	△1.7	105.4	1.3
III	4,552,199	-	4,575,985	-	-	-	△1.0	2.2	△0.3	107.4	2.0
IV	4,590,728	-	4,628,439	-	-	-	△1.1	1.1	0.8	104.5	2.5
2021 ^p . I	4,674,534	-	4,737,821	-	-	-	1.9	1.7	3.8	106.2	2.6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2. 총수입

(단위: 조원)

연도	구분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세입 세출외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사회보장 기여금		
2014		356.4	205.5	199.3	6.2	24.6	9.2	15.4	126.2	49.8	0.05
2015		371.8	217.9	210.8	7.1	23.7	8.4	15.3	130.2	53.1	0.05
2016		401.8	242.6	235.7	6.8	23.5	9.4	14.2	135.6	56.9	0.13
2017		430.6	265.4	258.5	6.9	25.5	11.0	14.5	139.5	60.5	0.14
2018	1	50.8	36.6	35.4	1.2	1.7	0.6	1.1	12.6	4.8	0.00
	2	77.4	49.9	48.4	1.5	6.0	4.0	1.9	21.5	9.6	0.00
	3	121.2	78.8	76.8	2.0	7.9	4.6	3.3	34.4	15.2	0.00
	4	169.9	109.8	106.6	3.2	11.0	5.9	5.0	49.1	21.6	0.00
	5	214.0	140.7	137.0	3.8	12.7	6.4	6.2	60.6	27.8	0.00
	6	243.8	157.2	152.9	4.3	14.7	7.0	7.7	71.8	33.0	0.07
	7	291.9	190.2	184.9	5.3	16.8	7.5	9.2	84.9	38.0	0.07
	8	327.1	213.2	207.6	5.6	18.4	8.1	10.4	95.4	43.6	0.09
	9	359.2	233.7	227.7	6.0	19.4	8.5	10.9	106.1	48.6	0.09
	10	403.3	263.4	256.7	6.7	21.3	9.3	12.0	118.5	54.0	0.09
	11	432.7	279.9	272.9	7.0	23.1	9.9	13.2	129.7	59.5	0.09
	12	465.3	293.6	285.9	7.7	26.0	10.7	15.3	145.1	64.9	0.58
2019	1	51.4	37.1	36.0	1.1	1.7	0.6	1.1	12.6	5.2	0.00
	2	77.5	49.2	47.7	1.4	5.7	3.4	2.3	22.6	10.4	0.00
	3	121.0	78.0	76.1	1.9	7.2	3.8	3.4	35.8	16.1	0.00
	4	170.8	109.4	106.4	3.0	10.1	5.1	5.1	51.3	22.9	0.00
	5	215.8	139.5	136.2	3.3	12.0	5.7	6.3	64.3	29.6	0.00
	6	246.0	156.2	152.5	3.7	14.1	6.2	7.9	75.7	35.1	0.00
	7	293.9	189.4	184.6	4.8	15.5	6.5	9.0	89.0	40.5	0.05
	8	326.6	209.5	204.5	5.0	16.8	6.9	9.9	100.2	46.4	0.05
	9	359.5	228.1	222.8	5.3	18.7	7.4	11.3	112.7	51.9	0.05
	10	406.2	260.4	254.2	6.2	20.2	7.9	12.3	125.5	57.5	0.05
	11	435.4	276.6	270.0	6.5	22.0	8.5	13.5	136.7	63.6	0.05
	12	473.1	293.5	286.0	7.4	25.3	9.5	15.7	154.0	69.6	0.37
2020	1	51.2	36.5	35.6	0.9	1.6	0.6	1.0	13.2	6.8	0.00
	2	77.8	46.8	45.6	1.1	6.7	4.7	2.0	24.3	11.3	0.00
	3	119.5	69.5	67.9	1.6	8.6	5.3	3.3	41.4	19.1	0.00
	4	166.3	100.7	98.4	2.2	10.6	6.3	4.3	55.1	24.7	0.00
	5	198.2	118.2	115.5	2.7	12.4	6.8	5.6	67.6	31.5	0.00
	6	226.0	132.9	129.6	3.4	13.1	6.9	6.2	79.9	37.4	0.01
	7	280.4	168.5	163.5	5.0	16.0	8.1	7.9	95.8	43.1	0.01
	8	317.8	192.5	186.9	5.6	17.6	8.7	8.9	107.6	49.4	0.01
	9	354.4	214.7	208.5	6.2	19.6	9.3	10.3	120.1	55.3	0.01
	10	409.5	253.8	246.2	7.6	21.7	9.8	11.9	134.1	61.5	0.01
	11	437.8	267.8	259.8	8.0	23.3	10.3	13.0	146.7	68.1	0.01
	12	478.8	285.5	276.3	9.3	26.9	11.7	15.2	166.2	74.6	0.08
2021	1	57.3	38.8	38.1	0.7	1.7	0.6	1.1	16.8	6.0	0.00
	2	97.1	57.8	56.3	1.5	8.2	6.1	2.0	31.2	11.8	0.00
	3	152.1	88.5	86.1	2.4	10.1	6.7	3.4	53.5	20.2	0.00
	4	217.7	133.4	129.1	4.3	13.0	8.4	4.6	71.3	26.2	0.00
	5	261.4	161.8	156.7	5.1	14.6	8.9	5.7	85.0	33.4	0.00
	6	298.6	181.7	175.8	5.9	16.4	9.5	6.8	100.4	39.7	0.0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1.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3	17.7	15.1	17.9	25.4	26.4	28.2	20.7	32.7	24.0
2004	16.7	15.7	18.3	26.2	26.7	27.4	20.5	33.2	24.1
2005	17.1	16.6	19.7	26.5	27.1	27.0	20.8	34.3	24.6
2006	17.8	17.1	20.5	26.7	27.3	28.5	21.6	34.4	24.8
2007	18.8	17.5	20.5	26.8	26.8	29.1	22.5	33.4	24.9
2008	18.4	16.8	19.4	26.0	26.6	28.7	22.9	33.2	24.2
2009	17.4	15.3	16.7	25.0	25.3	28.8	22.6	33.2	23.1
2010	17.2	15.6	17.3	26.1	26.0	28.7	21.7	32.3	23.2
2011	17.6	16.1	18.4	26.6	27.1	28.8	22.3	32.4	23.5
2012	17.8	16.5	18.6	26.0	27.9	30.6	22.9	32.3	23.9
2013	17.0	17.1	19.4	26.1	28.6	30.8	23.0	32.8	24.1
2014	17.1	18.3	19.8	26.3	28.5	30.4	22.9	32.6	24.4
2015	17.4	18.6	20.0	26.5	28.6	30.0	23.2	33.3	24.5
2016	18.3	18.3	19.7	26.5	28.7	29.5	23.5	34.4	25.0
2017	18.8	18.9	20.6	26.5	29.3	29.2	23.5	34.7	24.8
2018	19.9	19.2	18.3	26.6	29.9	28.9	24.0	34.3	24.9
2019	19.9*	-	18.4	26.6	30.5	29.2	24.1	33.7	-

* 2021.6.9 한국은행 발표 2019 확정 GDP 반영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2-2.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3	22.0	24.5	24.5	31.1	42.2	40.0	34.7	45.4	32.5
2004	21.2	25.2	24.8	32.2	42.4	39.2	34.3	45.7	32.5
2005	21.7	26.2	26.1	32.5	42.9	39.0	34.4	46.7	33.0
2006	22.6	27.0	26.8	32.7	43.3	40.5	34.9	46.1	33.1
2007	23.7	27.5	26.8	32.8	42.5	41.6	35.4	45.1	33.2
2008	23.6	27.4	25.7	32.1	42.3	41.6	35.8	44.1	32.6
2009	22.7	26.0	23.0	31.1	41.5	42.0	36.7	43.9	31.8
2010	22.4	26.5	23.5	32.1	42.1	41.7	35.5	43.1	31.9
2011	23.2	27.5	23.9	32.7	43.3	41.6	36.1	42.1	32.2
2012	23.7	28.2	24.0	32.1	44.4	43.6	36.8	42.3	32.7
2013	23.1	28.9	25.6	32.1	45.4	43.8	37.0	42.7	33.0
2014	23.4	30.3	25.9	32.1	45.5	43.3	36.8	42.4	33.2
2015	23.7	30.7	26.2	32.4	45.3	43.0	37.3	42.9	33.3
2016	24.7	30.7	25.8	32.6	45.4	42.2	37.7	44.3	34.0
2017	25.4	31.4	26.7	32.8	46.1	41.9	37.8	44.3	33.7
2018	26.7	32.0	24.4	32.9	45.9	41.9	38.5	43.9	33.9
2019	27.2*	-	24.5	33.0	45.4	42.5	38.8	42.9	-

* 2021.6.9 한국은행 발표 2019 확정 GDP 반영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3. 총지출

(단위: 조원)

연도	구분	총지출	예산		기금	세입세출외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7		406.6	275.2	225.6	49.6	127.3	4.04
2018	1	35.8	27.0	23.9	3.1	8.8	0.00
	2	76.5	57.6	49.5	8.1	18.9	0.00
	3	122.9	88.4	73.8	14.6	34.5	0.00
	4	169.6	119.2	99.6	19.6	44.5	5.94
	5	205.4	145.6	122.2	23.4	53.8	5.94
	6	247.3	175.5	147.1	28.4	65.8	5.94
	7	282.7	199.1	167.9	31.2	77.4	6.18
	8	311.1	218.1	184.8	33.3	86.9	6.18
	9	345.2	239.5	202.6	36.8	99.4	6.27
	10	374.6	259.9	220.2	39.7	108.5	6.27
	11	395.3	271.8	229.6	42.2	117.3	6.27
	12	434.1	293.7	246.5	47.2	133.8	6.60
2019	1	44.5	34.7	29.9	4.8	9.8	0.00
	2	89.3	69.1	59.5	9.7	20.1	0.10
	3	138.3	101.4	85.8	15.6	36.8	0.10
	4	196.7	137.1	116.1	21.1	49.1	10.5
	5	235.0	165.0	139.3	25.7	59.4	10.5
	6	284.5	200.7	168.8	31.9	73.2	10.6
	7	318.2	224.0	189.5	34.5	83.6	10.6
	8	348.9	245.1	207.9	37.2	93.2	10.6
	9	386.0	268.9	228.1	40.8	106.6	10.6
	10	417.6	291.0	247.0	44.0	116.0	10.6
	11	443.3	306.2	259.5	46.7	126.3	10.7
	12	485.1	329.0	277.7	51.3	144.9	11.2
2020	1	50.9	40.1	34.6	5.5	10.8	0.00
	2	104.0	80.3	67.9	12.3	23.8	0.00
	3	164.8	120.6	100.7	19.8	44.2	0.01
	4	209.7	150.3	126.8	23.5	59.3	0.1
	5	259.5	188.7	162.0	26.8	70.6	0.1
	6	316.0	228.7	193.9	34.8	87.2	0.1
	7	356.0	255.9	219.1	36.8	100.0	0.1
	8	388.7	277.2	237.9	39.3	111.4	0.1
	9	434.8	304.5	261.7	42.7	130.2	0.1
	10	468.5	327.5	281.4	46.1	140.9	0.1
	11	501.1	347.9	299.0	48.8	153.0	0.2
	12	549.9	374.4	320.8	53.6	175.2	0.4
2021	1	53.9	38.6	33.6	5.0	15.3	0.00
	2	109.8	80.8	68.6	12.1	29.1	0.00
	3	182.2	123.1	102.3	20.8	59.1	0.00
	4	234.0	157.5	131.4	26.1	74.2	2.3
	5	281.9	193.0	160.3	32.7	86.5	2.3
	6	345.8	238.5	197.6	40.9	105.0	2.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1. 분야별 세출예산

분 야	'17				'18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 총지출	400.5	(100)	410.1	(100)	428.8	(100.0)	432.7	(100.0)
	(3.7)		(6.1)		(7.1)		(8.0)	
1. 보건·복지·노동	129.5	(32.3)	131.9	(32.2)	144.7	(33.7)	145.8	(33.7)
	(4.9)		(6.9)		(11.7)		(12.6)	
2. 교 육	57.4	(14.3)	59.4	(14.5)	64.2	(15.0)	64.4	(14.9)
	(7.9)		(22.5)		(11.8)		(12.2)	
3. 문화·체육·관광	6.9	(1.7)	7.0	(1.7)	6.5	(1.5)	6.5	(1.5)
	(4.0)		(5.8)		(△6.3)		(△5.5)	
4. 환 경	6.9	(1.7)	7.1	(1.7)	6.9	(1.6)	7.0	(1.6)
	(0.8)		(3.1)		(△0.3)		(1.4)	
5. R&D	19.5	(4.9)	19.5	(4.8)	19.7	(4.6)	19.7	(4.6)
	(1.9)		(2.1)		(1.1)		(1.5)	
6.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16.0	(4.0)	18.8	(4.6)	16.3	(3.8)	18.2	(4.2)
	(△1.5)		(15.5)		(1.5)		(13.5)	
7. SOC	22.1	(5.5)	22.2	(5.4)	19.0	(4.4)	19.1	(4.4)
	(△6.6)		(△6.2)		(△14.2)		(△13.5)	
8. 농림수산 식품	19.6	(4.9)	19.8	(4.8)	19.7	(4.6)	19.8	(4.6)
	(1.2)		(2.1)		(0.5)		(1.0)	
9. 국방	40.3	(10.1)	40.3	(9.8)	43.2	(10.1)	43.2	(10.0)
	(4.0)		(4.0)		(7.0)		(7.0)	
10. 외교 · 통일	4.6	(1.1)	4.6	(1.1)	4.7	(1.1)	4.7	(1.1)
	(△2.4)		(△2.4)		(3.5)		(3.6)	
11. 공공질서·안전	18.1	(4.5)	18.2	(4.4)	19.1	(4.4)	19.1	(4.4)
	(3.7)		(4.2)		(5.1)		(5.1)	
12. 일반·지방행정	63.3	(15.8)	65.1	(15.9)	69.0	(16.1)	69.1	(16.0)
	(6.4)		(△2.9)		(8.9)		(9.0)	

(조원, %)

분 야	'19				'20				'21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1차 추경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 총지출	469.6	(100.0)	475.4	(100.0)	512.3	(100.0)	554.7	(100.0)	558.0	(100.0)	572.9	(100.0)
	(9.5)		(10.9)		(9.1)		(18.1)		(8.9)		(11.8)	
1. 보건·복지·노동	161.0	(34.3)	162.6	(33.9)	180.5	(35.2)	197.8	(35.7)	199.7	(35.8)	205.7	(35.9)
	(11.3)		(12.4)		(12.1)		(22.9)		(10.6)		(13.9)	
2. 교 육	70.6	(15.0)	70.7	(14.7)	72.6	(14.2)	71.0	(12.8)	71.2	(12.8)	71.4	(12.5)
	(10.1)		(10.2)		(2.8)		(0.5)		(△1.9)		(△1.7)	
3. 문화·체육·관광	7.2	(1.5)	7.3	(1.5)	8.0	(1.6)	8.1	(1.5)	8.5	(1.5)	8.7	(1.5)
	(12.2)		(13.4)		(10.6)		(12.0)		(6.3)		(8.1)	
4. 환 경	7.4	(1.6)	8.6	(1.8)	9.0	(1.8)	9.2	(1.7)	10.6	(1.9)	10.7	(1.9)
	(7.2)		(24.7)		(21.8)		(24.7)		(17.8)		(18.9)	
5. R&D	20.5	(4.4)	20.9	(4.3)	24.2	(4.7)	24.3	(4.4)	27.4	(4.9)	27.4	(4.8)
	(4.4)		(6.0)		(18.0)		(18.2)		(13.2)		(13.2)	
6. 산업·중소 기업·에너지	18.8	(4.0)	20.5	(4.3)	23.7	(4.6)	35.5	(6.4)	28.6	(5.1)	35.9	(6.3)
	(15.1)		(26.0)		(26.4)		(89.1)		(20.7)		(51.3)	
7. SOC	19.8	(4.2)	20.4	(4.3)	23.2	(4.5)	22.9	(4.1)	26.5	(4.7)	26.5	(4.6)
	(4.0)		(7.4)		(17.6)		(15.8)		(14.2)		(14.3)	
8. 농림수산 식품	20.0	(4.3)	20.3	(4.2)	21.5	(4.2)	21.4	(3.9)	22.7	(4.1)	22.9	(4.0)
	(1.5)		(2.8)		(7.4)		(6.8)		(5.6)		(6.4)	
9. 국방	46.7	(9.9)	46.7	(9.7)	50.2	(9.8)	48.4	(8.7)	52.8	(9.5)	52.8	(9.2)
	(8.2)		(8.2)		(7.4)		(3.6)		(5.2)		(5.4)	
10. 외교 · 통일	5.1	(1.1)	5.1	(1.1)	5.5	(1.1)	5.1	(0.9)	5.7	(1.0)	5.7	(1.0)
	(7.2)		(7.2)		(8.8)		(1.0)		(3.60)		(3.5)	
11. 공공질서·안전	20.1	(4.3)	20.2	(4.2)	20.8	(4.1)	20.7	(3.7)	22.3	(4.0)	22.3	(3.9)
	(5.5)		(6.0)		(3.5)		(2.8)		(7.2)		(7.1)	
12. 일반·지방행정	76.6	(16.3)	76.7	(16.0)	79.0	(15.4)	94.0	(16.9)	84.7	(15.2)	84.5	(14.7)
	(10.9)		(11.1)		(3.2)		(22.8)		(7.2)		(6.9)	

4. 재정수지

(단위: 조원, GDP 대비 %)

연도	구분	총수입(A)		총지출(B)		통합재정수지(A-B)			관리재정수지(A-B-C)	
			사회보장성 기금수입		사회보장성 기금지출		GDP대비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C)		GDP대비 (%)
2014		356.4	68.0	347.9	30.0	8.5	0.5	38.0	△29.5	△1.9
2015		371.8	70.9	372.0	33.1	△0.2	△0.0	37.8	△38.0	△2.3
2016		401.8	75.4	384.9	35.8	16.9	1.0	39.6	△22.7	△1.3
2017		430.6	81.2	406.6	38.7	24.0	1.3	42.5	△18.5	△1.0
2018	1	50.8	6.1	35.8	3.6	15.0		2.5	12.6	
	2	77.4	11.8	76.5	7.1	0.9		4.8	△3.9	
	3	121.2	19.8	122.9	11.1	△1.8		8.8	△10.5	
	4	169.9	28.5	169.6	14.7	0.2		13.8	△13.6	
	5	214.0	36.2	205.4	18.4	8.6		17.9	△9.2	
	6	243.8	43.9	247.3	21.9	△3.5		22.0	△25.5	
	7	291.9	50.3	282.7	25.5	9.2		24.7	△15.5	
	8	327.1	56.2	311.1	28.2	16.0		28.0	△12.0	
	9	359.2	63.1	345.2	31.8	14.0		31.3	△17.3	
	10	403.3	69.6	374.6	35.3	28.7		34.3	△5.7	
	11	432.7	77.6	395.3	40.1	37.4		37.6	△0.2	
	12	465.3	85.1	434.1	43.4	31.2	1.6	41.7	△10.6	△0.6
2019	1	51.4	6.2	44.5	4.2	6.9		2.0	4.9	
	2	77.5	12.5	89.3	8.0	△11.8		4.4	△16.2	
	3	121.0	20.3	138.3	12.4	△17.3		7.9	△25.2	
	4	170.8	29.4	196.7	16.5	△25.9		12.9	△38.8	
	5	215.8	38.0	235.0	20.7	△19.1		17.4	△36.5	
	6	246.0	45.6	284.5	24.6	△38.5		21.0	△59.5	
	7	293.9	52.7	318.2	28.7	△24.3		24.0	△48.2	
	8	326.6	59.9	348.9	32.8	△22.3		27.2	△49.5	
	9	359.5	67.5	386.0	37.0	△26.5		30.5	△57.0	
	10	406.2	75.2	417.6	41.1	△11.4		34.1	△45.5	
	11	435.4	82.8	443.3	45.0	△7.9		37.7	△45.6	
	12	473.1	91.1	485.1	48.7	△12.0	△0.6	42.4	△54.4	△2.8
2020	1	51.2	6.8	50.9	4.9	0.3		2.0	△1.7	
	2	77.8	13.9	104.0	9.2	△26.2		4.7	△30.9	
	3	119.5	24.3	164.8	14.3	△45.3		10.0	△55.3	
	4	166.3	32.1	209.7	18.9	△43.3		13.2	△56.6	
	5	198.2	40.5	259.5	23.8	△61.3		16.6	△77.9	
	6	226.0	49.5	316.0	28.9	△90.0		20.5	△110.5	
	7	280.4	56.8	356.0	34.3	△75.6		22.5	△98.1	
	8	317.8	64.5	388.7	39.4	△70.9		25.1	△96.0	
	9	354.4	72.9	434.8	44.9	△80.5		28.0	△108.4	
	10	409.5	81.4	468.5	49.8	△59.0		31.6	△90.6	
	11	437.8	89.6	501.1	54.6	△63.3		35.0	△98.3	
	12	478.8	100.0	549.9	59.1	△71.2	△3.7	40.8	△112.0	△5.8
2021	1	57.3	10.9	53.9	5.7	3.4		5.3	△1.8	
	2	97.1	20.4	109.8	10.8	△12.7		9.6	△22.3	
	3	152.1	35.3	182.2	16.8	△30.1		18.5	△48.6	
	4	217.7	46.4	234.0	22.4	△16.3		24.1	△40.4	
	5	261.4	55.7	281.9	27.7	△20.5		28.0	△48.5	
	6	298.6	65.6	345.8	33.1	△47.2		32.5	△79.7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5. 국가채무(중앙정부)

(단위: 조원, GDP 대비 %)

연도	구분	중앙정부 채무							
			%	국 채			차입금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국고 채권	국민 주택 채권	외평 채권			
2001		113.1	16.0	87.8	50.9	20.6	14.1	22.5	2.8
2002		126.6	16.1	103.1	55.6	25.7	20.7	20.7	2.8
2003		158.8	19.0	140.6	81.5	30.1	28.5	15.8	2.4
2004		196.1	21.6	182.9	123.1	32.4	27.5	10.7	2.5
2005		238.8	24.9	229.0	170.5	37.1	21.4	7.6	2.2
2006		273.2	27.2	264.3	206.8	42.9	14.7	6.4	2.5
2007		289.1	26.5	280.5	227.4	43.3	9.7	5.7	2.9
2008		297.9	25.8	289.4	239.3	44.9	5.2	5.3	3.2
2009		346.1	28.7	337.5	280.9	48.3	8.3	5.4	3.2
2010		373.8	28.3	367.2	310.1	49.0	8.0	3.5	3.1
2011		402.8	29.0	397.1	340.1	48.9	8.1	2.5	3.3
2012		425.1	29.5	420.0	362.9	49.5	7.6	2.3	2.8
2013		464.0	30.9	459.5	400.7	51.3	7.5	1.9	2.7
2014		503.0	32.2	498.1	438.3	52.8	7.0	2.6	2.4
2015		556.5	33.6	551.5	485.1	59.3	7.1	3.3	1.7
2016		591.9	34.0	587.5	516.9	64.0	6.7	3.9	0.5
2017		627.4	34.2	623.3	546.7	69.4	7.2	3.8	0.2
2018		651.8	34.3	648.4	567.0	73.3	8.0	3.2	0.2
2019		699.0	36.4	696.3	611.5	76.4	8.3	2.6	0.1
2020		819.2	42.6	815.2	726.8	78.9	9.5	3.3	0.7
2021.1		835.9	-	832.1	742.0	80.3	9.7	3.1	0.7
2021.2		853.6	-	849.8	759.4	80.7	9.7	3.1	0.7
2021.3		862.1	-	858.5	769.3	79.3	9.8	3.0	0.7
2021.4		880.4	-	877.0	787.3	80.0	9.7	2.8	0.7
2021.5		899.8	-	896.6	806.2	80.6	9.8	2.6	0.7
2021.6		898.1	-	894.9	804.3	80.8	9.8	2.5	0.7

1)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5-1.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2001	121.8	17.2	-	-	-	-
2002	133.8	17.0	-	-	-	-
2003	165.8	19.8	-	-	-	-
2004	203.7	22.4	-	-	-	-
2005	247.9	25.9	-	-	-	-
2006	282.7	28.1	-	-	-	-
2007	299.2	27.5	-	-	-	-
2008	309.0	26.8	-	-	-	-
2009	359.6	29.8	-	-	-	-
2010	392.2	29.7	-	-	-	-
2011	420.5	30.3	459.2	33.1	753.3	54.2
2012	443.1	30.8	504.6	35.0	821.1	57.0
2013	489.8	32.6	565.6	37.7	898.7	59.9
2014	533.2	34.1	620.6	39.7	957.3	61.3
2015	591.5	35.7	676.2	40.8	1003.5	60.5
2016	626.9	36.0	717.5	41.2	1036.6	59.5
2017	660.2	36.0	735.2	40.1	1044.6	56.9
2018	680.5	35.9	759.7	40.0	1078.0	56.8
2019	723.2	37.6	810.7	42.1	1132.6	58.9
2020	846.9	43.8	-	-	-	-

* '20년 D2, D3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1.12월)

5-2. 국고채 추이

(단위 : 조원, %, 기말)

구분		'15	'16	'17	'18	'19	'20	'21.1	'21.2	'21.3	'21.4	'21.5	'21.6
국고채 발행	국채 잔액 (외화표시 외평채 제외) (전체채권대비)	544.4	580.9	616.1	640.3	688.0	805.7	824.3	848.1	862.6	880.2	896.3	890.3
		(35.0)	(36.4)	(37.1)	(37.2)	(37.8)	(39.3)	(39.8)	(40.3)	(40.6)	(40.9)	(41.3)	(41.0)
	국고채 발행잔액 (전체채권대비)	485.1	516.9	546.7	567.0	611.5	726.8	742.0	759.4	769.3	787.3	806.2	804.3
		(31.2)	(32.4)	(33.0)	(33.0)	(33.6)	(35.5)	(35.8)	(36.1)	(36.2)	(36.6)	(37.1)	(37.1)
	국고채 발행*	109.3	101.1	100.8	97.4	101.7	174.5	15.6	17.7	17.2	18.2	19.1	18.3
국고채 유통	3년물 유통금리	1.662	1.638	2.135	1.817	1.360	0.976	0.971	1.020	1.133	1.141	1.227	1.448
	5년물 유통금리	1.184	1.799	2.343	1.884	1.480	1.335	1.320	1.449	1.601	1.630	1.739	1.739
	10년물 유통금리	2.076	2.074	2.469	1.948	1.683	1.713	1.768	1.960	2.057	2.128	2.179	2.092
	30년물 유통금리	2.207	2.159	2.434	1.927	1.682	1.823	1.907	2.055	2.150	2.255	2.292	2.196
국고채 외국인 보유현황		67.7	72.5	77.8	86.3	98.3	121.6	122.5	128.4	132.6	134.4	137.5	142.7
(국고채발행잔액대비)		(14.0)	(14.0)	(14.0)	(15.2)	(16.0)	(16.7)	(16.5)	(16.9)	(17.2)	(17.1)	(17.1)	(17.7)

* '21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186.3조원

6. 세계잉여금¹⁾

(단위: 억원)

연도	구분	일반회계 세입 (A)	일반회계 세출 (B)	결산상 잉여금(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C-D)					
					사용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상환 ²⁾	추경 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01		1,020,084	986,685	33,399	9,325	24,074	-	-	5,381	18,693
2002		1,133,800	1,089,183	44,617	11,756	32,861	-	-	14,168	18,693
2003		1,196,755	1,172,229	24,526	13,264	11,262	-	-	11,262	-
2004		1,196,460	1,182,362	14,098	12,372	1,726	-	-	1,726	-
2005		1,364,592	1,342,077	22,515	10,148	12,367	-	3,818	8,549	-
2006		1,478,667	1,448,360	30,307	16,577	13,730	13,728	-	-	-
2007		1,711,722	1,543,309	168,413	14,985	153,428	54,133	50,640	45,685	2,970
2008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2,947	21,836	20,979	-
2009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7,864	14,394	-	13,829
2010		2,052,235	1,971,371	80,864	21,350	59,514	15,817	22,285	-	21,412
2011		2,148,604	2,074,469	74,134	22,849	51,285	19,586	16,167	-	15,532
2012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1,886	3,390	3,257	-
2013		2,323,929	2,295,443	28,485	27,673	812	-	414	-	398
2014		2,392,256	2,363,607	28,649	27,685	964	-	491	472	-
2015		2,619,383	2,578,816	40,567	15,290	25,277	-	12,891	12,386	-
2016		2,816,746	2,739,981	76,765	15,845	60,920	38,091	11,644	11,186	-
2017		2,929,006	2,804,840	119,166 ³⁾	18,745	100,422	59,762	20,736	19,923	-
2018		3,162,185	2,999,460	122,725 ³⁾	16,150	106,575	105,292	654	629	
2019		3,322,397	3,308,841	13,555	12,936	619	619	-	-	-
2020		3,923,670	3,852,230	71,441	14,248	57,193	22,653	17,615 ^e	16,924 ^e	

1)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의미

2)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

3) 초과세수를 이용한 국채상환 '17년 0.5조원, '18년 4.0조원 차감

7. 국유재산 현황

(단위: km², 억원)

연도	구분	국유재산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기타
		수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2001	1,883,446	15,559	855,465	190,341	649,442	188,198
2002	1,955,207	15,616	810,825	205,219	745,358	193,805
2003	2,023,770	15,710	808,191	222,021	783,784	209,774
2004	2,176,295	15,842	810,386	241,754	864,933	259,222
2005	2,643,794	16,003	1,056,250	271,526	1,047,310	268,708
2006	2,700,805	16,166	1,065,739	290,160	1,068,466	276,440
2007	2,757,525	16,316	1,067,863	317,836	1,084,726	287,100
2008	3,096,441	16,420	1,077,385	352,814	1,313,441	352,801
2009	2,968,200	16,554	1,089,919	378,364	1,142,199	357,718
2010	3,174,828	16,660	1,085,475	424,558	1,274,254	390,541
2011*	8,743,377	24,023	4,361,579	418,381	1,438,480	2,524,937
2012	8,922,246	24,056	4,357,326	471,452	1,434,022	2,659,446
2013	9,120,698	24,236	4,346,113	525,113	1,546,465	2,703,007
2014	9,384,902	24,521	4,374,692	580,211	1,670,031	2,759,968
2015	9,901,975	24,718	4,485,830	616,825	1,988,350	2,810,970
2016	10,444,088	24,940	4,670,080	652,422	2,243,460	2,878,126
2017	10,757,551	24,996	4,630,097	677,188	2,456,556	2,993,710
2018	10,817,553	25,062	4,677,016	699,211	2,418,389	3,022,938
2019	11,250,365	25,158	4,848,771	726,592	2,670,304	3,004,697
2020.12	11,514,892	25,240	5,070,150	759,326	2,700,168	2,985,248
2021.1**	11,641,720	25,255	5,194,622	744,432	2,746,699	2,955,966
2021.2**	11,588,483	25,285	5,206,294	744,877	2,649,797	2,987,514
2021.3**	11,600,496	25,281	5,206,298	747,620	2,658,134	2,988,443
2021.4**	11,634,101	25,313	5,207,979	750,277	2,668,102	3,007,742
2021.5**	11,632,400	25,294	5,209,306	752,492	2,664,745	3,005,857
2021.6**	11,651,517	25,301	5,215,896	756,320	2,671,536	3,007,765

* '11년도부터 국유재산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2011.8.24.) 제정에 따른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 2019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년, '21년 자료는 잠정

7-1. 국유지 현황

(단위: km², %)

연도	구분	국유지					
		행정재산 ¹⁾		보존재산 ²⁾		일반재산 ³⁾	
		면적		면적		면적	
			비율		비율		비율
2001	15,559	12,627	81	785	5	2,147	14
2002	15,616	12,854	82	796	5	1,966	13
2003	15,710	13,078	83	823	5	1,809	12
2004	15,842	13,259	84	870	5	1,713	11
2005	16,003	13,496	84	927	5	1,580	11
2006	16,166	13,722	85	1,016	6	1,428	9
2007	16,316	13,886	85	1,099	7	1,331	8
2008	16,419	14,066	86	1,159	7	1,194	7
2009	16,554	15,431	93	-	-	1,123	7
2010	16,660	15,585	94	-	-	1,075	6
2011*	24,024	23,031	96	-	-	993	4
2012	24,056	23,129	96	-	-	927	4
2013	24,236	23,359	96	-	-	877	4
2014	24,521	23,668	97	-	-	853	3
2015	24,718	23,875	97	-	-	843	3
2016	24,940	24,109	97	-	-	831	3
2017	24,996	24,193	97	-	-	803	3
2018	25,062	24,276	97	-	-	786	3
2019	25,158	24,370	97	-	-	788	3
2020.12**	25,240	24,427	97	-	-	813	3
2021.1**	25,255	24,441	97	-	-	814	3
2021.2**	25,285	24,446	97	-	-	839	3
2021.3**	25,281	24,465	97	-	-	816	3
2021.4**	25,313	24,473	97	-	-	840	3
2021.5**	25,294	24,478	97	-	-	816	3
2021.6**	25,301	24,484	97	-	-	817	3

* '11년부터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행정재산(보존용)중 유산자산(문화재, 국립공원, 보호구역)은 결산에서 제외됨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자료는 잠정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도로, 구거 등)

2) 보존재산: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국유림 등), '09년부터 행정재산에 합산하여 결산

3)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8. 기금·투자물 운용현황

1. 기금자산운용 현황

(단위: 십억원)

	2018년		2019년		2020년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총계(68개)	778,769	1.23%	785,868	3.02%	883,569	2.83%
사회보험성기금(6개)	690,518	-1.87%	703,327	8.51%	799,328	8.72%
고용보험기금	10,494	-2.22%	8,594	7.06%	6,843	5.72%
공무원연금기금	9,913	-1.45%	9,638	8.36%	9,211	10.50%
국민연금기금	634,916	-0.89%	647,691	11.33%	742,239	9.58%
군인연금기금	1,038	-2.18%	1,059	5.59%	1,140	3.8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6,481	-2.39%	16,767	11.15%	18,890	11.4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7,676	-2.09%	19,578	7.58%	21,004	11.20%
금융성기금(8개)	19,758	2.01%	20,909	2.30%	25,143	2.45%
기술보증기금	2,059	2.21%	2,011	2.35%	2,354	2.2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854	2.04%	685	2.40%	691	2.0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	1.53%	0	1.60%	2	0.47%
무역보험기금	3,350	2.12%	3,328	2.60%	3,969	3.2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0	2.32%	837	2.36%	854	2.96%
신용보증기금	6,006	1.98%	6,234	2.57%	8,035	2.6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27	1.85%	695	1.95%	1,584	1.5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761	2.06%	7,119	2.54%	7,653	4.44%
계정성기금(4개)	16,305	1.61%	10,034	2.04%	8,296	1.48%
공공자금관리기금	16,038	1.42%	9,785	1.55%	8,017	0.72%
공적자금상환기금	15	1.88%	27	2.09%	22	1.45%
복권기금	171	1.24%	109	2.58%	156	2.27%
양곡증권정리기금	81	1.91%	113	1.93%	102	1.47%
사업성기금(50개)	52,187	1.45%	51,598	2.55%	50,802	2.29%
과학기술진흥기금	18	1.72%	27	1.74%	22	1.04%
관광진흥개발기금	109	1.76%	281	1.82%	218	1.47%
국민건강증진기금	294	1.72%	246	1.75%	443	1.05%
주택도시기금	40,157	-0.42%	38,410	6.06%	37,977	5.05%
국민체육진흥기금_국민체육진흥계정	790	-0.55%	980	3.67%	895	4.48%
국민체육진흥기금_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	-	-	32	1.52%
국유재산관리기금	1,102	0.79%	1,303	2.92%	934	4.71%
국제교류기금	123	0.11%	105	5.01%	74	4.38%
군인복지기금	776	1.49%	814	2.53%	785	2.79%
근로복지진흥기금	101	-0.19%	107	3.53%	125	6.41%
금강수계관리기금	4	1.70%	9	1.81%	12	1.1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	1.70%	14	1.74%	9	1.02%

	2018년		2019년		2020년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남북협력기금	201	0.90%	87	2.25%	90	1.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77	1.50%	265	4.04%	134	1.43%
농어업재해보험기금	173	2.19%	164	2.02%	123	1.28%
농지관리기금	1,167	1.00%	905	2.77%	737	2.80%
대외경제협력기금	116	1.78%	137	1.87%	118	1.18%
문화예술진흥기금	66	4.83%	148	4.25%	204	4.49%
문화재보호기금	23	1.71%	19	1.76%	19	1.1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57	-0.75%	2,638	4.75%	2,877	4.68%
방송통신발전기금	144	2.33%	205	2.14%	153	1.7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	1.71%	13	1.74%	6	1.04%
보훈기금	179	0.42%	159	3.02%	120	3.67%
사학진흥기금	38	1.67%	103	1.94%	113	1.01%
석면피해구제기금	17	2.85%	14	2.54%	17	3.10%
수산발전기금	124	0.38%	199	2.87%	169	3.8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2	2.44%	83	2.21%	80	1.9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4	1.70%	33	1.73%	88	1.03%
언론진흥기금	12	1.79%	16	1.91%	18	1.84%
양성평등기금	14	1.71%	24	1.73%	24	1.0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1.64%	10	1.77%	21	1.30%
영화발전기금	218	0.66%	166	4.31%	90	2.69%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27	1.71%	28	1.74%	22	1.04%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8	2.05%	76	2.13%	95	1.92%
응급의료기금	104	1.71%	91	1.77%	194	1.04%
임금채권보장기금	790	-1.22%	826	5.16%	721	5.6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16	2.06%	201	2.03%	174	1.5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020	0.51%	1,050	4.64%	1,156	7.59%
전력산업기반기금	336	2.12%	232	1.81%	226	1.08%
정보통신진흥기금	177	1.68%	257	2.35%	184	1.6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	1.78%	84	1.93%	157	2.18%
지역신문발전기금	5	1.71%	6	1.90%	6	1.39%
청소년육성기금	23	1.72%	24	1.75%	22	1.31%
축산발전기금	180	1.69%	207	1.70%	128	1.17%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기금	58	1.88%	65	1.84%	71	1.07%
한강수계관리기금	104	2.10%	143	2.15%	147	1.6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8	1.72%	362	1.79%	489	1.0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	1.73%	12	1.71%	33	1.08%
국제질병퇴치기금	47	1.60%	51	2.09%	42	1.4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95	1.99%	204	2.19%	208	2.57%

※ 수익률은 기금별 수익률의 단순평균값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산 이관(20~)

2. 기금별 자산배분비중 현황(2020년)

(단위: %)

기금명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국내 혼합형	국내 주식형	기타	단기 자산	중장기 자산
기금 전체(68개)	2.3	0.3	1.3	41.7	0.7	16.9	36.9	2.6	97.4
기금(68개)별 평균	39.6	14.7	9.4	16.0	10.4	2.1	7.8	54.3	45.7
사회보험성 기금(6개) 전체	0.8	0.0	0.0	41.1	0.1	18.2	39.7	0.8	99.2
사회보험성 기금(6개)별 평균	7.9	0.0	0.0	30.0	12.6	16.1	33.3	8.0	92.0
고용보험기금	14.4	0.0	0.0	38.1	0.0	15.7	31.8	14.4	85.6
공무원연금기금	12.7	0.1	0.0	30.1	0.0	18.8	38.3	12.7	87.3
국민연금기금	0.4	0.0	0.0	41.7	0.0	18.1	39.8	0.4	99.6
군인연금기금	15.3	0.0	0.0	0.0	75.9	0.0	8.8	15.3	84.7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8	0.0	0.0	31.3	0.0	20.9	46.0	1.8	98.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1	0.0	0.0	39.1	0.0	22.9	34.9	3.1	96.9
금융성 기금(8개) 전체	1.8	6.3	42.6	40.4	8.4	0.0	0.5	8.1	91.9
금융성 기금(8개)별 평균	14.1	12.1	37.6	29.9	5.9	0.0	0.4	26.2	73.8
기술보증기금	0.3	0.0	56.7	38.0	4.8	0.0	0.1	0.3	99.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2	0.0	68.0	24.0	6.8	0.0	0.0	1.2	98.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무역보험기금	3.9	1.5	36.3	44.0	11.3	0.0	3.0	5.4	94.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0.2	0.0	49.7	45.0	5.1	0.0	0.0	0.2	99.8
신용보증기금	2.6	0.0	44.8	48.4	4.2	0.0	0.0	2.6	97.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5	95.5	0.0	0.0	0.0	0.0	0.0	100.0	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1	0.0	45.0	40.1	14.8	0.0	0.0	0.1	99.9
계정성 기금(4개) 전체	97.8	1.2	0.0	0.0	1.0	0.0	0.0	99.0	1.0
계정성 기금(4개)별 평균	62.5	24.0	0.0	0.0	13.5	0.0	0.0	86.5	13.5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공적자금상환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복권기금	46.1	0.0	0.0	0.0	53.9	0.0	0.0	46.1	53.9
양곡증권정리기금	3.9	96.1	0.0	0.0	0.0	0.0	0.0	100.0	0.0
사업성 기금(50개) 전체	9.8	2.7	1.2	57.7	5.8	6.3	16.5	12.4	87.6
사업성 기금(50개)별 평균	45.6	16.2	6.8	13.4	10.6	0.9	6.5	61.8	38.2
과학기술진흥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관광진흥개발기금	12.0	87.7	0.0	0.0	0.0	0.0	0.3	99.7	0.3
국민건강증진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주택도시기금	4.4	0.6	0.0	70.7	0.0	7.5	16.8	5.0	95.0
국민체육진흥기금_국민체육진흥계정	6.7	17.5	19.4	3.0	53.2	0.0	0.2	24.2	75.8
국민체육진흥기금_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2.2	36.4	61.4	0.0	0.0	0.0	0.0	38.6	61.4
국유재산관리기금	7.9	0.0	18.0	0.0	68.5	0.0	5.5	7.9	92.1
국제교류기금	2.9	2.0	11.4	69.0	0.0	4.4	10.3	4.9	95.1
군인복지기금	20.6	1.5	3.6	0.0	51.2	0.0	23.2	22.1	77.9
근로복지진흥기금	11.3	10.1	16.1	0.0	54.5	0.0	8.0	21.4	78.6

기금명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국내 혼합형	국내 주식형	기타	단기 자산	중장기 자산
금강수계관리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5.5	4.5	0.0	0.0	0.0	0.0	0.0	100.0	0.0
남북협력기금	59.8	16.2	19.0	4.7	0.0	0.6	0.0	75.9	24.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8.1	23.7	0.0	4.4	0.0	1.7	2.0	91.8	8.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1.0	89.0	0.0	0.0	0.0	0.0	0.0	100.0	0.0
농지관리기금	23.2	3.5	0.0	1.9	71.3	0.0	0.0	26.7	73.3
대외경제협력기금	83.9	9.2	3.3	3.6	0.0	0.0	0.0	93.1	6.9
문화예술진흥기금	10.8	24.2	0.0	25.8	0.0	5.1	34.1	35.0	65.0
문화재보호기금	88.7	11.3	0.0	0.0	0.0	0.0	0.0	100.0	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8	0.0	0.8	67.8	0.0	5.2	20.5	5.8	94.2
방송통신발전기금	46.8	47.4	3.2	2.5	0.0	0.2	0.0	94.1	5.9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보훈기금	3.9	0.0	0.0	0.0	96.1	0.0	0.0	3.9	96.1
사학진흥기금	74.7	25.3	0.0	0.0	0.0	0.0	0.0	100.0	0.0
석면피해구제기금	9.8	0.0	3.5	85.5	0.0	1.2	0.0	9.8	90.2
수산업발전기금	21.3	0.0	0.0	0.0	0.0	0.0	78.7	21.3	78.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1.9	37.9	0.0	0.0	50.2	0.0	0.0	49.8	50.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언론진흥기금	13.5	46.1	0.0	40.4	0.0	0.0	0.0	59.6	40.4
양성평등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9.9	18.0	52.1	0.0	0.0	0.0	0.0	47.9	52.1
영화발전기금	7.1	0.3	6.1	52.6	26.4	0.0	7.5	7.4	92.6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1	3.1	63.9	27.9	0.0	0.0	1.0	7.2	92.8
응급의료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임금채권보장기금	4.3	0.0	0.0	0.0	0.0	7.5	88.2	4.3	95.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6.5	63.5	0.0	0.0	0.0	0.0	0.0	100.0	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6	0.0	0.0	0.0	55.7	11.3	28.4	4.6	95.4
전력산업기반기금	98.8	1.2	0.0	0.0	0.0	0.0	0.0	100.0	0.0
정보통신진흥기금	25.6	67.3	2.7	1.7	2.5	0.1	0.0	92.9	7.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69.1	30.9	0.0	0.0	0.0	0.0	0.0	100.0	0.0
지역신문발전기금	20.8	50.5	0.0	28.7	0.0	0.0	0.0	71.3	28.7
청소년육성기금	57.6	27.6	12.0	2.8	0.0	0.0	0.0	85.3	14.7
축산발전기금	86.1	13.9	0.0	0.0	0.0	0.0	0.0	100.0	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94.9	3.6	0.0	1.4	0.0	0.0	0.0	98.5	1.5
한강수계관리기금	23.2	8.1	34.3	34.4	0.0	0.0	0.0	31.3	68.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7.8	0.0	0.0	22.2	0.0	0.0	0.0	77.8	22.2
국제질병퇴치기금	38.9	26.7	9.7	24.8	0.0	0.0	0.0	65.6	34.4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4.2	0.0	0.0	95.8	0.0	0.0	0.0	4.2	95.8

* 전체: 기금별 운용평잔을 고려한 가중 평균

** 평균: 기금별 자산비중의 단순 평균

3. 기금별 투자율 예치비중

(단위: 십억원, %)

	2018년			2019년			2020년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총계(68개)	778,769	18,065	2.3	785,868	20,555	2.6	883,569	24,232	2.7
사회보험성기금(6개)	690,518	1,051	0.2	703,327	1,162	0.2	799,328	1,357	0.2
고용보험기금	10,494	-	0.0	8,594	0	0.0	6,843	0	0.0
공무원연금기금	9,913	-	0.0	9,638	72	0.7	9,211	169	1.8
국민연금기금	634,916	-	0.0	647,691	0	0.0	742,239	0	0.0
군인연금기금	1,038	1,022	98.5	1,059	1,049	99.1	1,140	1,132	99.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6,481	30	0.2	16,767	40	0.2	18,890	56	0.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7,676	-	0.0	19,578	0	0.0	21,004	0	0.0
금융성기금(8개)	19,758	4,458	22.6	20,909	5,395	25.8	25,143	9,059	36.0
기술보증기금	2,059	605	29.4	2,011	571	28.4	2,354	808	34.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854	204	23.9	685	123	18.0	691	124	18.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	-	0.0	0	-	0.0	2	-	0.0
무역보험기금	3,350	1,126	33.6	3,328	1,255	37.7	3,969	2,021	50.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0	196	24.5	837	352	42.1	854	430	50.3
신용보증기금	6,006	1,130	18.8	6,234	1,607	25.8	8,035	3,061	38.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27	40	4.3	695	36	5.2	1,584	59	3.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761	1,158	20.1	7,119	1,452	20.4	7,653	2,556	33.4
계정성기금(4개)	16,305	554	3.4	10,034	1321	13.2	8,296	1,755	21.2
공공자금관리기금	16,038	383	2.4	9,785	1212	12.4	8,017	1,600	20.0
공적자금상환기금	15	-	0.0	27	0	0.0	22	0	0.0
복권기금	171	171	100.0	109	109	100.0	156	156	100.0
양곡증권정리기금	81	-	0.0	113	0	0.0	102	0	0.0
사업성기금(50개)	52,187	12,002	23.0	51,598	12,677	24.6	50,802	12,061	23.7
과학기술진흥기금	19	19	100.0	27	27	100.0	22	22	100.0
관광진흥개발기금	109	109	99.5	281	280	99.6	218	217	99.7
국민건강증진기금	294	294	100.0	246	246	100.0	443	443	100.0
주택도시기금	40,157	2,375	5.9	38,410	2,312	6.0	37,977	2,056	5.4
국민체육진흥기금_국민체육진흥 계정	790	541	68.5	980	872	89.0	895	719	80.4
국민체육진흥기금_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	-	-	-	-	32	0	0.0
국유재산관리기금	1,102	860	78.1	1,303	899	69.0	934	765	82.0
국제교류기금	123	99	80.2	105	86	81.9	74	65	87.0
군인복지기금	776	719	92.6	814	743	91.3	785	725	92.4
근로복지진흥기금	101	101	100.0	107	107	100.0	125	125	100.0
금강수계관리기금	4	4	100.0	9	9	100.0	12	12	99.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	13	99.2	14	13	92.9	9	8	94.3

	2018년			2019년			2020년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남북협력기금	201	86	42.8	87	33	37.9	90	57	63.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77	224	46.9	265	163	61.5	134	109	81.6
농어업재해보험기금	173	1	0.7	164	35	21.3	123	34	27.4
농지관리기금	1,168	843	72.2	905	846	93.5	737	728	98.8
대외경제협력기금	116	87	74.6	137	124	90.5	118	103	87.3
문화예술진흥기금	66	24	36.6	148	45	30.4	204	33	16.3
문화재보호기금	24	24	100.0	19	19	100.0	19	19	10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57	1,845	94.3	2,638	1,746	66.2	2,877	1,568	54.5
방송통신발전기금	144	26	18.3	205	27	13.2	153	12	8.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	21	100.0	13	13	100.0	6	6	100.0
보훈기금	179	179	100.0	159	159	100.0	120	120	100.0
사학진흥기금	38	37	97.1	103	50	48.5	113	81	71.1
석면피해구제기금	17	17	100.0	14	13	92.9	17	17	96.5
수산발전기금	124	124	100.0	199	199	100.0	169	169	10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2	92	100.0	83	83	100.0	80	80	100.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4	44	98.9	33	31	93.9	88	88	100.0
언론진흥기금	12	12	100.0	16	16	100.0	18	15	83.6
양성평등기금	14	14	100.0	24	24	100.0	24	24	1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3	96.9	10	7	70.0	21	6	28.9
영화발전기금	218	190	87.0	166	145	87.3	90	84	93.1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27	27	100.0	28	28	100.0	22	22	100.0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8	10	20.8	76	13	17.1	95	31	32.9
응급의료기금	104	104	100.0	91	91	100.0	194	194	100.0
임금채권보장기금	790	790	100.0	826	826	100.0	721	721	99.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16	122	56.6	201	103	51.2	174	112	64.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020	1,020	100.0	1,050	1,031	98.2	1,156	1,113	96.3
전력산업기반기금	336	237	70.6	232	212	91.4	226	222	98.4
정보통신진흥기금	177	33	18.4	257	37	14.4	184	19	10.5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	74	100.0	84	57	67.9	157	49	31.5
지역신문발전기금	5	5	100.0	6	6	100.0	6	5	91.4
청소년육성기금	23	19	84.3	24	19	79.2	22	15	68.2
축산발전기금	180	180	100.0	207	207	100.0	128	128	10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58	52	89.1	65	59	90.8	71	70	98.5
한강수계관리기금	104	52	50.0	143	47	32.9	147	77	52.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8	198	100.0	362	362	100.0	489	489	10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	10	100.0	12	12	100.0	33	33	100.0
국제질병퇴치기금	47	39	82.3	51	50	98.0	42	42	100.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95	6	3.0	204	143	70.1	208	208	99.9

8-1. '20년 기금 자산운용 평가 결과

◆ ('20년 기금 자산운용 평가) 41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제외) 평가 결과,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으로 평가

- ①(운용성과) 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한 적극적 운용으로 수익률 9.19% 달성 ②(전략) 위기관리 체계* 신속 구축, ESG투자 안착** 등 긍정 평가

* 위기인식지수 등 위기모니터링 지표 마련·활용, 위기대응TF구성(주택도시기금 등)

**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에 'ESG 투자현황' 지표 도입(기술보증기금 등)

〈자산운용평가 결과*〉

등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총41개	1	13	24	2	1	-

* (탁월)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우수) 공무원연금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 별도 평가*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한 수익률 및 운용체계 개선 노력으로 평점 소폭 상승 ('19년 75.9점(양호) → '20년 78.3점(양호))

*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17년~)

- ①(운용성과)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률 9.58% 달성
- ②(전략) 전문위원회 법제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 등 운용전략 선진화

* 3개 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 투자정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위)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

** 장기(20~30년) 자산·부채 흐름을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자산배분 전략

9. 보증채무 현황

(단위: 조원, GDP 대비 %)

연도	구분	보증채무				
		GDP 대비*(%)	예보채상환 기금채권 ¹⁾	장학재단 채권 ²⁾	수리자금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³⁾
2017	21.1	1.2	9.7	11.4	0.02	-
2018	17.0	0.9	5.9	11.1	0.01	-
2019	14.8	0.8	3.9	10.9	-	-
2020.1.	14.7	-	3.9	10.8	-	-
2020.2.	14.8	-	3.9	10.9	-	-
2020.3.	14.8	-	3.9	10.9	-	-
2020.4.	14.8	-	3.9	10.9	-	-
2020.5.	14.7	-	3.9	10.8	-	-
2020.6.	14.6	-	3.9	10.7	-	-
2020.7.	14.5	-	3.9	10.6	-	-
2020.8.	14.5	-	3.9	10.6	-	-
2020.9.	14.4	-	3.9	10.5	-	-
2020.10.	14.7	-	3.9	10.6	-	0.2
2020.11.	12.5	-	1.5	10.6	-	0.4
2020.12.	12.5	-	1.5	10.5	-	0.5
2021.1.	11.7	-	0.8	10.4	-	0.5
2021.2.	11.8	-	0.8	10.4	-	0.6
2021.3.	11.9	-	0.8	10.5	-	0.6
2021.4.	11.7	-	0.8	10.3	-	0.6
2021.5.	11.7	-	0.8	10.3	-	0.6
2021.6.	11.7	-	0.8	10.3	-	0.6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1)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0.2조원, 6월말 기준 발행실적 없음

2) 장학재단채권: '21년 보증한도 1.5조원, 6월말 기준 2,600억원 발행

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21년 보증한도 40.0조원('20년 발행분 차감), 6월말 기준 2,900억원 발행

10. 국가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국가채권						
		융자 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조세채권	경상 이전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기타채권
2005	1,309,449	1,068,659	105,107	78,344	31,307	6,860	19,172
2006	1,371,215	1,102,995	120,801	75,361	49,690	5,964	16,404
2007	1,448,024	1,131,011	161,705	79,947	49,286	5,545	20,530
2008	1,816,401	1,368,547	245,753	127,022	48,140	5,236	21,703
2009	1,747,314	1,274,268	302,333	103,109	44,993	4,475	18,136
2010	1,859,500	1,271,254	402,386	113,384	52,259	4,488	15,730
2011	1,813,990	1,191,221	391,257	143,627	52,764	12,858	22,263
2012	2,025,431	1,244,448	504,314	140,979	104,060	15,027	16,613
2013	2,237,460	1,247,499	613,758	222,967	112,537	17,518	23,180
2014	2,376,314	1,261,542	733,727	261,725	77,941	19,092	22,286
2015	2,678,314	1,285,690	973,963	298,281	80,953	18,507	20,920
2016	2,976,041	1,323,247	1,184,931	336,483	91,307	19,763	20,310
2017	3,169,260	1,420,066	1,227,652	376,539	101,010	20,783	23,209
2018	3,428,359	1,542,182	1,323,165	414,934	105,312	22,600	20,166
2019	3,792,599	1,661,090	1,534,296	441,086	110,881	24,592	20,654
2020	4,113,075	1,773,529	1,708,113	469,290	118,277	25,141	18,726

〈회계·기금별 국가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국가채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5	1,309,449	99,763	373,235	836,450
2006	1,371,215	96,576	344,977	929,662
2007	1,448,024	107,536	177,377	1,163,111
2008	1,816,401	152,238	183,925	1,480,238
2009	1,747,314	127,353	171,924	1,448,037
2010	1,859,500	141,802	160,490	1,557,209
2011	1,813,990	183,122	158,645	1,472,223
2012	2,025,431	175,951	149,699	1,699,780
2013	2,237,460	276,828	125,987	1,834,645
2014	2,376,314	324,161	115,446	1,936,707
2015	2,678,314	366,942	106,277	2,205,095
2016	2,976,041	409,741	100,435	2,465,865
2017	3,169,260	457,394	89,750	2,622,116
2018	3,428,359	498,458	85,233	2,844,670
2019	3,792,599	527,296	81,678	3,183,624
2020	4,113,075	558,332	79,182	3,475,561

* '20년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 정책융자에 따른 융자회수금 +11.2조원,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에 따른 예금 및 예탁금 +17.4조원 증가로 '19년 대비 32.0조원(8.5%) 증가

11. 부담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연도	개수		징수규모 및 사용								
			귀속주체별			분야별					
			중앙	지자체	공공 기관 등	산업· 에너지	환경	금융	국토 교통	보건 의료	기타
2001	101	67,683	53,745	6,789	7,149	31,119	11,559	5,905	5,404	99	13,595
2002	102	79,013	59,068	9,760	10,185	27,459	14,282	6,644	5,792	5,109	19,727
2003	100	93,006	67,652	12,193	13,160	22,636	17,843	14,143	6,909	7,020	24,454
2004	102	101,509	75,249	13,311	12,948	25,208	19,591	15,633	8,024	8,061	24,992
2005	102	112,647	89,289	12,628	10,730	29,420	21,526	18,179	8,200	12,921	22,400
2006	100	121,132	94,674	11,643	14,814	31,340	21,046	17,368	9,118	14,940	27,321
2007	102	145,882	109,850	17,825	18,207	33,833	24,259	22,489	14,170	15,486	35,645
2008	101	152,707	120,057	13,663	18,987	35,464	24,323	26,105	9,162	16,369	41,283
2009	99	148,047	117,740	13,277	17,031	36,258	25,323	28,057	10,089	16,380	31,941
2010	94	144,591	125,854	13,947	4,790	40,390	22,842	29,264	8,483	15,848	27,763
2011	97	148,101	128,894	13,732	5,476	40,528	23,571	30,913	8,827	15,689	28,573
2012	97	156,690	135,973	15,073	5,644	43,374	25,025	34,269	8,836	15,497	29,689
2013	96	163,934	106,127	15,775	5,837	45,341	26,171	36,905	9,439	15,333	30,745
2014	95	171,797	149,032	16,533	6,232	47,441	26,330	37,864	8,122	16,284	35,757
2015	94	191,076	165,165	18,671	7,239	51,278	27,649	38,288	8,128	24,782	40,951
2016	90	196,706	169,636	20,090	6,980	49,827	27,080	38,062	9,792	29,670	42,275
2017	89	201,561	173,419	21,355	6,788	49,535	26,859	40,839	14,279	29,768	40,281
2018	90	209,920	181,422	21,938	6,560	52,715	27,191	42,888	12,552	30,714	43,860
2019	90	204,282	176,819	21,315	6,148	47,529	28,970	45,401	12,498	28,156	41,728
2020	90	201,847	175,418	20,174	6,255	43,571	26,664	49,743	12,504	29,726	39,639

* 각 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11-1. '20년 부담금 운용 결과

◆ **('20년 부담금 운용 결과)** '20년도 부담금 수는 총 90개*, 납부규모는 총 20.2조원**으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2조원(△1.2%) 감소

* 부담금수(개) : ('14) 95 → ('16) 90 → ('18) 90 → ('20) 90

** 납부규모(조원) ('14) 17.2 → ('16) 19.7 → ('18) 21.0 → ('20) 20.2

● **감소 :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총 42개* 부담금 1.4조원 감소

* 출국납부금(△0.3조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0.1조원) 등

● **증가 :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총 42개* 부담금이 1.2조원 증가

*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0.2조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0.2조원) 등

◆ **(귀속)** 중앙 17.5조원, 지자체 2.0조원, 공공기관 0.6조원 등

◆ **(사용)** 신용보증재원 등 금융 5.0조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산업·에너지 4.4조,
국민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 2.7조원 등

12. 정부출자 현황(21.6월말 기준)

(단위: 억원, %)

주무부처	기관명	수권 자본금	납입 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 (B)	지분율 (B/A)
기재부	1 한국조폐공사	150	66	66	100.00
산업부	2 대한석탄공사	4,500	601	601	100.00
	3 한국광물자원공사	20,000	20,000	19,973	99.86
	4 한국전력공사	60,000	32,098	5,842	18.20
	5 한국가스공사	10,000	4,616	1,207	26.15
	6 한국지역난방공사	2,000	579	200	34.55
	7 한국석유공사	130,000	106,087	106,087	100.00
환경부	8 한국수자원공사	100,000	97,087	91,003	93.73
국토부	9 한국도로공사	400,000	382,878	335,602	87.65
	10 한국부동산원	500	90	44	49.40
	11 인천국제공항공사	80,000	36,178	36,178	100.00
	12 주택도시보증공사	50,000	32,653	18,124	68.25
	13 한국공항공사	100,000	23,578	22,541	95.60
	14 한국철도공사	220,000	107,427	107,427	100.00
	15 한국토지주택공사	400,000	393,913	349,203	88.65
해수부	16 부산항만공사	80,000	32,975	28,790	87.31
	17 인천항만공사	50,000	20,677	16,680	80.67
	18 울산항만공사	80,000	4,405	3,846	87.31
	19 여수광양항만공사	60,000	15,523	11,053	71.20
방송통신위원회	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3,000	100.00
	공 기 업(20)	1,850,150	1,314,431	1,157,467	88.06
문화부	21 한국관광공사	500	324	179	55.20
농림부	22 한국농어촌공사	50,000	14,658	14,658	100.00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	683	683	100.00
산업부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00	550	550	100.00
금융위	25 한국자산관리공사	30,000	16,119	12,407	76.97
	26 한국주택금융공사	50,000	20,616	14,166	68.71
	준정부기관(6)	136,500	52,951	42,644	80.53
기재부	27 한국수출입은행	150,000	127,483	87,628	68.74
	28 한국투자공사	10,000	1,000	1,000	100.00
국토부	29 새만금개발공사	30,000	13,970	13,970	100.00
	30 한국해외개발지원공사	5,000	3,936	2,050	52.08
해수부	31 한국해양진흥공사	50,000	29,493	15,800	53.57
금융위	32 한국산업은행	300,000	218,866	218,866	100.00
	33 중소기업은행	100,000	42,114	23,722	59.50
보훈처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	20	20	100.00
	기타 공공기관(8)	645,020	436,881	363,055	83.10
산업부	35 대한송유관공사	2,700	1,981	193	9.76
문화부	36 서울신문사	2,177	416	127	30.49
국토부	37 공항철도주식회사	2,287	2,252	922	40.94
방통위	38 한국방송공사	3,000	2,062	2,062	100.00
	39 한국교육방송공사	1,000	889	889	100.00
	공공기관 외(5)	11,164	7,600	4,193	55.17
	합 계 (39)	2,642,834	1,811,862	1,567,358	86.51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0년 배당			'21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기금	소계	당기 순이익	일반 회계	특별·기금	소계	배당 성향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71	2,248	3,920	33,328	2,275	3,570	5,845	20.00
2 중소기업은행	1,662	-	1,662	12,632	2,208	0	2,208	29.52
3 한국산업은행	1,030	90	1,120	4,875	1,925	172	2,096	43.00
4 한국주택금융공사	0	0	0	1,871	392	33	425	33.46
5 한국수출입은행	713	11	724	1,024	273	4	277	39.80
6 한국가스공사	79	13	92	△936	-	-	-	-
7 한국공항공사	209	195	404	△1,481	-	-	-	-
8 한국도로공사	1	332	334	305	1	118	120	44.47
9 부산항만공사	201	-	201	457	238	-	238	59.80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39	-	139	585	142	-	142	39.97
11 울산항만공사	107	0.1	107	147	77	0.1	77	59.90
12 인천항만공사	15	5	21	879	157	56	213	30.00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	11	63	25	-	25	40.00
14 한국조폐공사	39	-	39	△109	-	-	-	-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	13	5	2	-	2	40.00
16 한국부동산원	13	-	13	53	10	-	10	40.02
17 한국방송공사	1	-	1	327	33	-	33	10.10
18 한국농어촌공사	165	-	165	92	9	-	9	10.30
19 한국전력공사	-	-	-	19,515	1,421	-	1,421	40.00
20 한국관광공사	-	-	-	△477	-	-	-	-
21 한국교육방송공사	-	-	-	64	3	4	8	12.20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147	-	-	-	-
23 한국수자원공사	-	-	-	3,377	-	-	-	-
24 한국석유공사	-	-	-	△31,715	-	-	-	-
25 한국광물자원공사	-	-	-	△16,403	-	-	-	-
26 한국철도공사	-	-	-	△12,381	-	-	-	-
27 서울신문사	-	-	-	5	-	-	-	-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116	-	-	-	-
29 한국해양진흥공사	-	-	-	25,857	-	-	-	-
30 새만금개발공사	-	-	-	△93	-	-	-	-
31 해외인프라지원공사	-	-	-	△70	-	-	-	-
32 인천국제공항공사	-	3,994	3,994	△4,268	-	-	-	-
33 주택도시보증공사	-	707	707	2,918	-	616	616	24.99
34 한국투자공사	-	367	367	967	-	580	580	60.00
35 대한송유관공사	-	8	8	306	-	10	10	34.99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	-	-	0.3	-	0.2	0.2	59.65
37 한국지역난방공사	-	-	-	279	-	39	39	40.00
38 공항철도주식회사	-	-	-	734	-	-	-	-
39 대한석탄공사	-	-	-	△1,141	-	-	-	-
합계	6,069 (18개)	7,971 (13개)	14,040 (22개)	80,694	9,194 (17개)	5,203 (13개)	14,396 (22개)	36.92

13-1. '21년 정부배당수입 현황

◆ 2021년 정부배당금(1조 4,396억원)은 전년대비 증가(+356억원) 하였으며, 평균 배당 성향(36.92%)은 전년대비 4.34%p 상승

■ 정부 배당수입 추이

(단위: 개, 억원, %, %p)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출자기관수	36	36	38	39	39	-
정부배당금	15,562	18,060	14,382	14,040	14,396	+356
일반회계	7,888	8,622	6,696	6,069	9,194	+3,125
특별·기금	7,674	9,438	7,685	7,971	5,203	△2,768
배당성향	31.89	34.98	32.48	32.58	36.92	+4.34

14.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조원)

연도·유형		구 분	인원현황			재무현황		
			계	정원		자산	부채	당기 순이익
				임원	직원			
2016	공기업		126,972	183	126,789	563.0	363.0	9.0
	준정부기관		93,783	313	93,470	203.2	123.6	6.5
	기타공공기관		107,724	323	107,401	33.4	13.7	0.1
2017	공기업		132,715	184	132,531	569.0	364.1	4.2
	준정부기관		100,786	321	100,465	207.1	118.1	2.9
	기타공공기관		112,423	325	112,098	33.8	13.0	0.2
2018	공기업		139,988	186	139,802	579.3	371.2	2.0
	준정부기관		114,326	321	114,005	209.6	118.2	△1.3
	기타공공기관		129,058	338	128,720	39.3	14.0	0.0
2019	공기업		147,046	186	146,860	600.1	388.1	1.2
	준정부기관		121,039	324	120,715	218.4	122.3	△0.5
	기타공공기관		152,252	349	151,903	42.3	16.5	0.1
2020	공기업		150,080	187	149,893	615.7	397.9	△0.6
	준정부기관		123,988	328	123,660	235.9	125.7	3.1
	기타공공기관		161,667	360	161,307	50.8	21.2	2.8

* 인원현황은 '21년 지정 350개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

** 재무현황은 '21년 지정 347개 공공기관(수은, 산은, 기은 제외) 결산 기준으로 작성

〈참고1〉 재정 용어 해설

-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국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방, 치안, 사회복지 등 정부의 일반적인 기능과 연관되는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다.
- **특별회계**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총지출**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더한 후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총지출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IMF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통합재정규모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통합재정규모는 용자지출에서 용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를 지출에 계상하고, 총지출은 용자지출 전체를 지출에 계상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 **총수입**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모두 더한 후에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부 수입규모이다.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 **국세수입**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수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수입이다.
- **세외수입**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재산수입·경상이전수입·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수입대체경비 수입·관유물 매각대·융자회수금·국공채 및 차입금·차관수입·전년도 이월금·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01 GFS 기준에 따라 '12년에 처음으로 '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IMF, OECD 등 국가간의 재정건전성 비교시에 주로 이용된다.
-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는 '12년에 IMF, OECD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에 근거한 것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간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4년 2월에 '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 **국가채무**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 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 **국채**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현재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재원마련을 위해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다.
- **국가채권** 국가채권은 융자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사회보장기여금 등에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금전청구권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회의 사전 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실제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 **국유재산**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크게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존재산이 있다.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 그 주요 사례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정부는 부담금 운용 관리를 위해 매년 부담금운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 **세계잉여금**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것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고,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세계잉여금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개별 특별회계법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 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한은잉여금**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비용, 법인세 및 법정적립금 등을 뺀 것을 말한다. 그 중 법정적립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적립하는 금액으로 결산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차지한다. 나머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순이익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게 된다.
-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연기금투자풀**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2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개별 연기금이 예탁한 여유자금을 투자풀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선정한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 예탁 여부, 예탁규모 등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2〉 2021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 매월 7일을 기준으로 하되, 월·토요일, 공휴일 등을 고려해서 조정

구분	발간예정일	구분	발간예정일
1월	12일(화)	7월	8일(목)
2월	9일(화)	8월	10일(화)
3월	9일(화)	9월	7일(화)
4월	7일(수)	10월	7일(목)
5월	11일(화)	11월	9일(화)
6월	8일(화)	12월	7일(화)

※ 발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공지 후 변경할 예정입니다.